

# IV

## KEDI 주요 사업성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난 50년간 연구 외에도 수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사업은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정책, 제도 등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은 사업 추진 당시의 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라진 사업도 있고,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분화와 재편에 따라 더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지 않게 된 사업들도 있다.

IV장에서는 2021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사업 중 17개 주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한다. 본 장에서 제시한 KEDI 주요 사업 17개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KEDI의 주요 사업

번호	사업명
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2	교육개발협력연구·사업
3	교육복지 정책 사업
4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사업
5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6	교육통계사업
7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8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
9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
10	시·도교육청 평가 사업
11	영재교육 연구·사업
12	위(Wee) 프로젝트 운영지원 사업
13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
14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
15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
16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사업
17	OECD 교육연구 사업

## 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sup>58)</sup>

### 가. 사업 개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교육부, 2018).

-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육의 질 제고
-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 전문적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 제공

사업 추진 체계로서 교육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반적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세부 운영계획 수립, 역량진단 운영, 컨설팅 등을 실행한다. 교원양성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진단 실시 및 자료 제출, 개선 노력 등을 해야 한다.

주요 진단 대상은 교사 자격증(2급)을 발급하는 모든 기관이다. 일반대학의 사범대(45개), 교육과(63개), 교직과정(126개), 교육대학원(169개)과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대학교(10개)와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등의 유아교육과(80개), 유치원교사 양성학과(보육과, 2개), 보건교사 양성학과(간호학과, 42개), 실기교사 양성학과(26개) 등을 포함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A등급(교육부장관 표창), B등급(양성 인원 현행 유지), C등급(정원 감축 30%), D등급(정원 감축 50%), E등급(폐지)의 후속 조치가 취해지며,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이 자체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나. 도입 배경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최초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그것의 필요성은 교원양성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1980년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1991년에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58) 이동엽(교원정책연구실장) 집필

제기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확보 및 교원양성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평가인정체제’를 제안하였다(김기수, 2012).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1996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교육개혁방안인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양성제도의 개혁’을 통해서이다. 여기에서 “교원양성기관은 질을 관리할 여유 없이 난립됨으로써 양성과정의 질에 대한 회의를 심화시켜 왔고, 양성기관의 난립이 초래한 교원수급의 지나친 불균형은 양성과정의 유인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7)라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당위성을 얻게 되었고, 최희선 외(1997)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실시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원양성기관 평가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98년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한 1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다. 추진 과정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 평가라는 이름으로 1998년부터 1주기가 시작되어,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진행되었다. 2018년 5주기부터는 ‘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주기별 주요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1주기

1주기 평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되었다. 1998년 사범대학을 시작으로 교육대학원, 교육대학교, 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대한 평가가 순차적으로 5년간 실시되었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 존재하고 있던 교원양성기관의 여건, 운영 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교원양성기관평가위원회, 1997). 즉, 교원양성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정한 교원양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교원양성기관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김기수, 2012). 1주기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는 5대 기본영역으로 ‘교육과정’, ‘수업’, ‘교수’, ‘학생’, ‘행·재정 및 시설·설비 영역’을 설정되었다. 선택적 추가 영역으로 ‘특성화’와 ‘정성적 종합’ 평정이 실시되었다(교원양성기관평가위원회, 1997: 11). 지표는 총 102개로 매우 많았는데, 그 이유는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졸업 요구 이수 학점에서 일반 교육학·교과 교육학·교과 내용학의 필수/선택 비율,

2-3학년 대상 전공(필수와 선택) 과목에서 수업계획서를 작성·배포한 강좌의 비율, 사범대학 사용 교단 지원 교구(TV, VCR, OHP스크린, 실물 화상기 등) 구비 현황, 교수의 교육부·교육청(시·도 교원 연수원 포함)·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 참여 실적 및 활동 등과 같은 매우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 2) 2주기

2주기 평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었다. 1주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사범대를 시작으로 교육대학원, 교육대학교, 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설치학과 순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기관수가 많은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은 각각 2년에 걸쳐 평가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총 7년이 소요되었다. 2주기 평가는 1주기에 비해 평가영역과 지표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평가결과도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로 일관성 있게 평정하였다(김기수, 2012).

1주기 사범대학 평가 시에는 총 7개 영역의 102개 지표가 사용되었으나, 2주기 평가에서는 사범대학 교육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로 최소한의 필수 평가내용을 지표화 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불필요한 서류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체 평가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7개 영역이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의 3개 영역으로 축소되고, 지표수도 102개에서 39개로 대폭 축소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한편, 2주기 때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교육 수요자 조사 만족도는 평가지표 체계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총점 계산 시 반영하여 산정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2주기 평가지표의 개수는 40개였다고 할 수 있다.

## 3) 3주기

3주기 평가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 종료되었다. 1, 2주기 평가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모형을 새롭게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구자역 외, 2009). 1~2주기와 달리 3주기 평가에서는 각 대학에 설치된 모든 유형의 교원양성기관들을 동시에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여러 교원양성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양상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 입장에서는 매년 대상을 바꿔가며 평가를 받게 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김기수, 2012). 또한, 4년

제 대학에 한정하여 실시되었던 평가를 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까지로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되었다.

3주기 평가를 1, 2주기 평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적 후속조치가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1, 2주기 평가는 시범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3주기 평가부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가 시행되었다. 신규 평가에서 C, D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양성과정은 1년 이내 재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승인인원 감축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교원양성기관들은 평가 준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으며, 교원양성기관평가가 교육의 질 관리가 아닌 정원관리 기제로서 인식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송경오, 2016).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는 1, 2주기에 비해 매우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성과 평가가 강화되었다. 1, 2주기 평가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과 운영실태 등 주로 투입과 과정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3주기에서는 성과 영역으로서 교원양성기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둘째, 3주기 평가부터 후속 제재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량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비교사 수업수행능력’ 지표가 추가되었다. 이 지표는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전문적 소양 등을 교원양성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습득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실연을 직접 평가하는 지표였으며, 실적 및 서류 중심의 기존 지표와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었다(구자역 외, 2009).

#### 4) 4주기

4주기 평가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 종료되었다. 4주기 평가는 3주기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교원양성기관이 교원양성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핵심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3주기 지표 중 중요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이 높은 핵심 지표들을 추가하였다(오세희 외, 2013). 이를 통해 전체적인 지표수는 3주기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3주기 평가가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대학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강태중 외, 2014), 정성지표 비중의 확대를 통해 정량지표와의 균형을 맞췄다. 둘째, 교원양성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로 개선하였다. 사범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육대학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을 통해 각 기관의 특징과 장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김기수 외, 2015). 마지막으로는 평가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평가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재평가 없이 1회 평가만을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집중도를 제고하였

으며,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김기수 외,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재평가 제도의 폐지 및 3주기에 비해 더욱 강화된 행정적 제재 조치는 대학의 평가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강화된 제재 조치 기준은 5주기까지 지속되었다.

## 5) 5주기

5주기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에 종료되었으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5주기에는 사업명이 변경된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되었다(교육부, 2018; 한국교육개발원, 2020). 첫째, 피드백을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다. 대학별로 4주기 역량진단 컨설팅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였고, 정량지표 척도를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영역을 강화하여, 전체의 50% 내외의 배점으로 설정하였다. 특별히, 학교·교실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지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셋째, 신규 지표의 경우 배점을 최소화 했으며, 차기 진단에서 중요하게 진단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넷째, 예비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자의 노력을 진단 할 수 있도록 수업실연 지표를 개선하였으며,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KEDI 조사 및 검증 지표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정량지표 진단과 정성지표 진단을 분리 운영하여 지표 성격에 따라 진단위원 구성 및 진단 방법을 달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성과

1998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8; 홍창남 외, 2017).

첫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진단·평가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질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둘째,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자체 개선 노력을 자극하였다. 교원양성기관들은 진단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전임 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자체 개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던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및 전공이 축소, 폐지됨에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결과에 따른 후속 제재 조치가 시행된 3주기 이후부터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많은 교원양성기관이 교사양성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양성 체제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2) 향후 전망

새로운 교사양성 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의제화를 거쳐 최근 정책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2020. 12. 15)에서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교육부(2021. 12. 10)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교원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시작되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양성기관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가치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성과 타당성,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이를 확인하고, 유도하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교사 교육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교원양성기관 인증센터’의 설립과 함께 인증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사 교육의 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 2. 교육개발협력연구·사업<sup>59)</sup>

### 가. 사업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연구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우리 원에서 수행해 온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와 사업은 교육부 등 특정한 정부부처의 정책 실행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에 맞는 개별 연구와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특성을 가진다. 먼저, 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 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2000년대 초부터

59) 안해정(교육복지연구실장) 집필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협력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하며 교육개발협력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의 전략을 탐색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요구가 높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우리 원의 정책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프로젝트사업보다는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연수나 컨설팅사업 위주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관련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교육 ODA 컨퍼런스를 다년 간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개발협력 관련 국제회의를 지원해 왔다.

## 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여국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교육’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협력 요구가 매우 높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제한된 ODA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발협력 전략이 강조되었으며, 다른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ODA 모델 개발과 적용에 집중하였다.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 국제적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선진화된 원조방식을 적용해 왔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교육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년도에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는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2015년에 수립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교육 분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다 함께 교육 분야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 왔다. 2000년 이후 국제사회는 이러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의 책무성과 파트너십 강화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리 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의 범위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 원조조화 및 파트너십 강화 등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 다. 추진 과정

우리 원의 교육개발협력연구·사업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우리 원에서 수행한 교육개발협력연구는 크게 (1)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와 (2) 지역 또는 특정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개발협력사업은 크게 (1)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사업과 (2) 교육개발협력 관련 컨퍼런스 또는 회의 개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교육개발협력연구

#### □ 교육개발협력 전략 연구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던 2010년 이전에는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준비하는 후발 공여국으로서 다른 선진공여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개발협력 동향에 따라 우리 원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교육개발협력 및 교육 ODA 사업 및 전략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및 협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교육 ODA 확대 및 실천 전략 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 형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수립된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표 IV-2】 주요 교육개발협력 전략 연구 목록

주제	연구명
한국형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 구축 연구(2008)</li> <li>·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2009)</li> <li>·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한국교육발전 경험 분석(2009)</li> </ul>
교육개발협력 전략 및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ODA, 현황과 개선방안(2009)</li> <li>· 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분야 ODA 발전전략(2011)</li> <li>· 교육과학기술 ODA 확대 전략(2011)</li> <li>· 한국의 교육 ODA 실천전략 연구(2012)</li> <li>·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2013)</li> <li>· 글로벌 교육협력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2013)</li> <li>·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사업의 추진 전략과 과제: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의 협업 방안을 중심으로(2014)</li> <li>· 교육부 ODA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연구(2014)</li> <li>·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2014)</li> </ul>
글로벌 교육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 2015 교육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전략: 교육의제 실천을 중심으로(2015)</li> <li>·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2016)</li> <li>·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Ⅰ-Ⅵ)(2017~2022)</li> </ul>

#### □ 지역 및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에서 특정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이나 국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이나 국가별로 처한 환경이나 역사 및 문화가 달라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년에 걸쳐 수행해 온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연구」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각 협력 국가의 교육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을 통해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표 IV-3】 주요 지역 및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연구 목록

구분	연구명
지역 및 다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2006)</li> <li>·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협력 수요분석 연구(2008)</li> <li>· 선진국의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 정책 및 사례분석 연구(2008)</li> <li>·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공공부문 교육협력사업 분석연구: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2008)</li> <li>·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민간부문 교육협력사업 분석연구: 대학과 비정부조직(NGOs)을 중심으로(2008)</li> <li>·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권역별 교육협력방안 연구(2009)</li> <li>·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2007~2009)</li> <li>· 아프리카와의 교육협력을 위한 과제(2012)</li> <li>·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2010~2012)</li> <li>·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2013~2015)</li> <li>· 중점협력국가별 교육협력전략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4)</li> <li>· 중점협력국가의 교원교육 분야 협력 방안 연구(2015)</li> <li>·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2016~2025)</li> </ul>
단일 협력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2015)</li> <li>· 캄보디아와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초등교원 역량 강화(2016)</li> <li>·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캄보디아와의 교육개발협력 방안: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2019)</li> <li>· SDG 4 이행을 위한 베트남 교육통계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방안(2019)</li> </ul>

## 2) 교육개발협력사업

### □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우리 원이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개발협력사업 중 하나는 역량강화 연수이다.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탁사업으로 수행되었다. KOICA의 글로벌연수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분야 관련 공무원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한국의 교육 소개, 기관 방문, 워크숍을 통한 액션 플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역량강화 연수이다. 우리 원에서는 2016년 이라크 교육공무원 연수 이후 잠시 시행되지 않다가 2021년 스리랑카 교육통계 관련 공무원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연수사업을 온라인 연수로 수행하였다.

우리 원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스리랑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교육 개선 사업」에서 과학, 기술, 수학, 상업 교사 배치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스리랑카 중등교육의 개선과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컨퍼런스 및 회의 개최

우리 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개발협력의 성과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회의를 개최해왔다.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 ODA 컨퍼런스’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유일의 교육개발협력 컨퍼런스로서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교육 ODA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다. 또한, 우리 원은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협력 관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을 지원하였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수행되었던 우리 원의 교육개발협력은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전후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교육개발협력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원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개발도상국 교육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및 KOICA 등 ODA 전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원의 교육개발협력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육회복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상황에서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요구와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사교육, 고등·평생교육, 교육통계, 디지털교육, 교육복지,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정책연구방법 등 우리 원의 전문 영역에서 협력 요구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원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원내 구성원의 이해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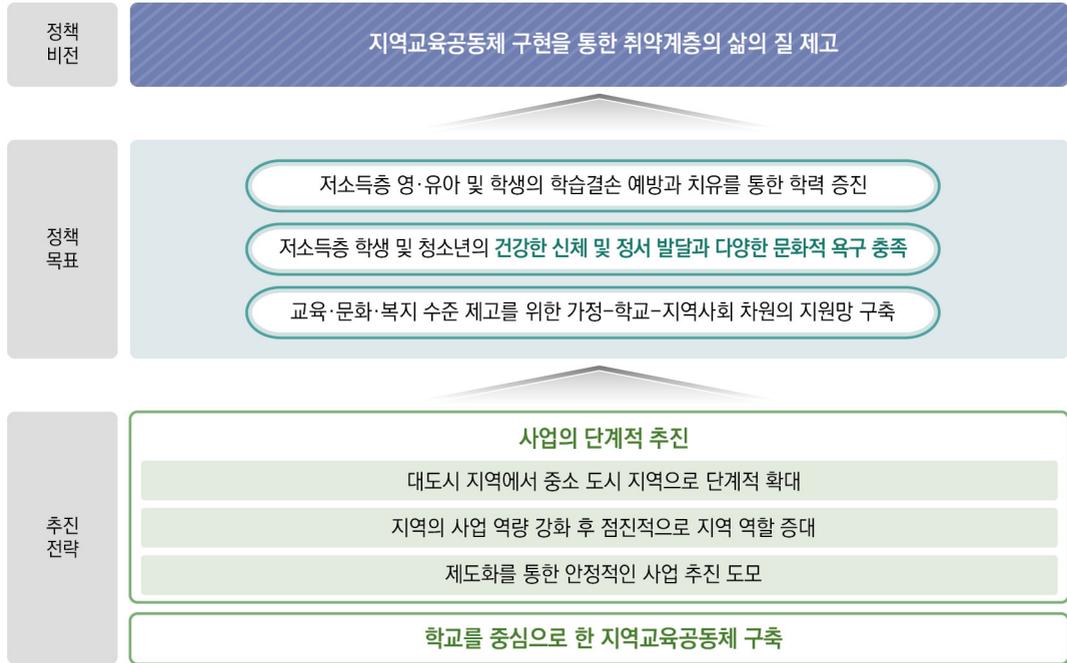
### 3. 교육복지 정책 사업<sup>60)</sup>

#### 가. 사업개요

교육복지라는 말이 널리 확산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 이후이다. 그 전 5.31교육개혁에서도 사용된 바 있고,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KEDI는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도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 것은 상기 정책 이후이다. 이 정책은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정책으로 분화되어 이후 ‘교육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는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서는 교육복지 정책이 확산되는 기점이 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정책 모델링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취약 계층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이외 다른 교육적 자원이 취약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방임될 경우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될 수 있기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원에서의 이 사업 모델 개발과 현장 실현 지원의 기저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 문화, 정서 등의 면에서 복합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비 제공과 같은 단순한 방식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불리한 지역의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의식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 사업 이후 다수의 교육 정책에서 이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아동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학교와 연계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60) 김경애(미래교육연구본부장)·류방란(원장) 집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5: 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 길잡이.

Ⅰ 그림 IV-1 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정책 사업 개요

## 나. 도입 배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산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심화, 계층간 지역 분리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교육기회 취약지역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도시 내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하여 도시지역, 특히 도시 주변부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설계되었다. 2002년 7월과 8월 11개 부처 장관회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기한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복지 대책의 필요성에 여러 부처가 공감하였다. 또한 같은 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에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여건 개선 대책이 포함되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기획단에서 지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작업을 추진하였다.

KEDI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실행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실태 및 요구(2004)»,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2005)»,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2006)»,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2006)»,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6)」 등. 초기에는 여러 지표를 동원하여 정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우선 대도시 저소득층의 전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지역의 행정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지방세 납부액’, ‘가구주 교육수준’ 등의 저소득 지표를 반영하여 하위 10~20%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을 선정하여 기초학력 수준, 학업 중단자, 장기 결석자 등의 교육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서울 6개, 부산 2개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 내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모델을 설계하였다(「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2004)»,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계획 구체화 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연구(2006)」 등). 도시 지역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해 활동을 하던 전문가들과의 작업을 통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이 처한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 안게 된 중첩된 취약성에 대응하여 [그림 IV-2]와 같은 구체적인 모델과 방향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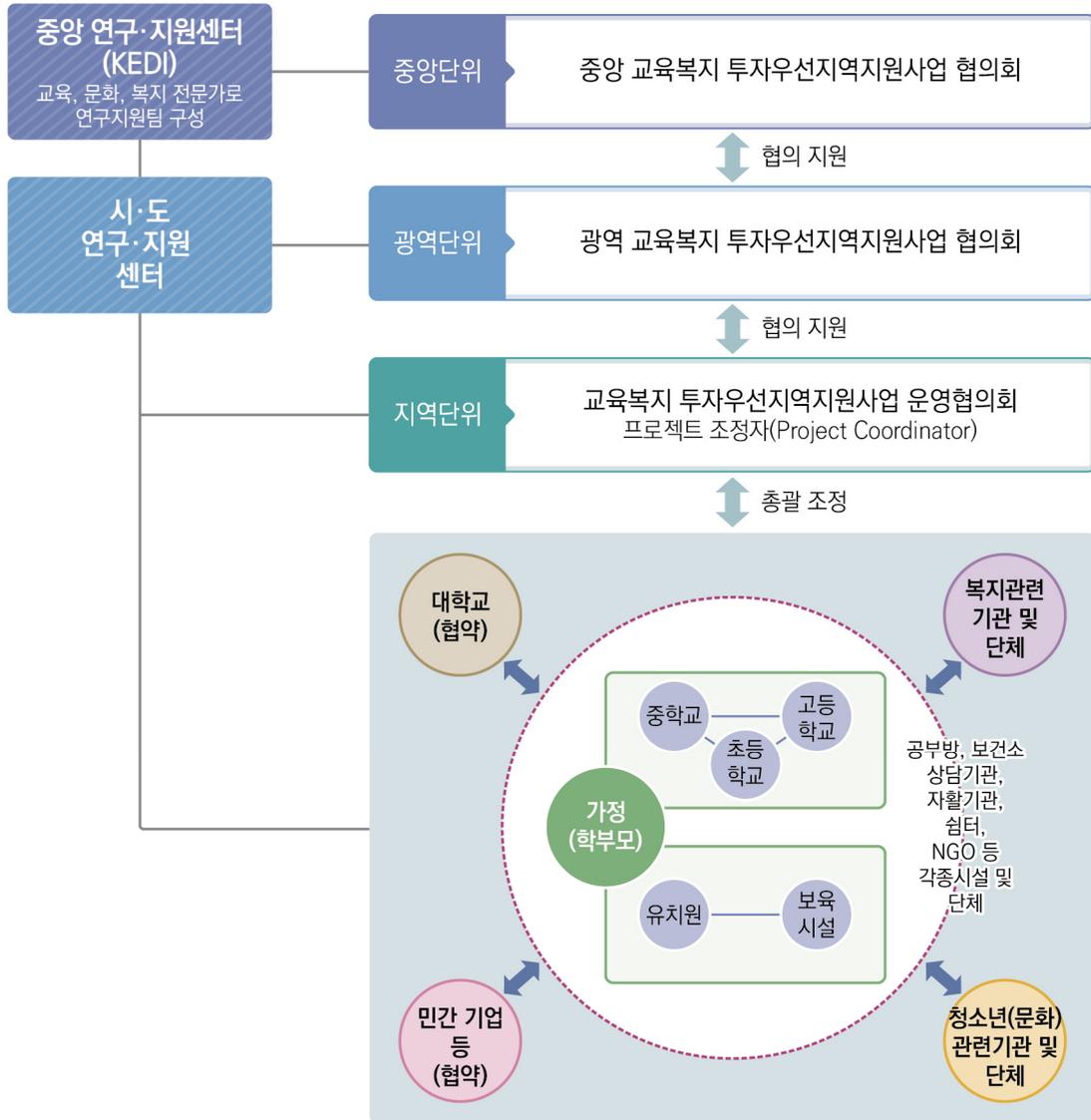
대상	영역	목표	학교, 지역에서 시행되는 활동(프로그램) 예시
학생	학습 (주지 교과 학습 보충)	학력 증진과 학습 지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강조)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 사업 소규모 혹은 일대일 기초 학력 부진 학생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정규 교육과정 연계된 체험학습,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보충 학습 지원 등
	문화·체험 (예·기·체능 및 관련자치활동)	다양한 문화 체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고려)	특기 적성, 문화 체험 관련 방과후 활동 등 동아리활동, 학급활동, 축제 등
	심리·정서 (심리 정서적 지원, 심리 상담, 치료)	특별한 문제 또는 욕구 충족을 통한 정신 건강 도모	심리 상담(개별, 집단), 가족상담 학습 장애 진단과 치료, 부적응 학생 진단 및 치료 정서 지원 멘토링
	복지 (보육 및 보건)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 및 보호	방과후 돌봄 교실, 야간 보호 교실, 건강 검진 및 치료
교사 학부모 등	지원	사업 운영 지원	학부모 연수, 교사연수, 사업 홍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교사의 사업 활동 지원 학습자료개발, 교과연구 등 교원전문성 신장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 출처: 류방란 외(2011: 2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중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를 재구성

■ 그림 IV-2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내용

이후 실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원은 중앙연구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을 기본 단위로 한 이 사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한 연구, 분석,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5: 1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 길잡이.

그림 IV-3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정책 추진 체제

## 다. 추진과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원은 이 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까지 약 10년간 중앙연구지원센터로서 연구와 사업 지원이 선순환을 이루도록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에 도움을 주고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원은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 안내서 발간, 사업 평가와 평가보고서 발간, 우수 사례 수집과 공유, 사업 관계자(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장, 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연수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교육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이나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우리 원에서는 초기부터 이 정책은 교육정책이며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특히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사가 주축이 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사업 초기 교사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추진 안내서(매뉴얼, 길잡이)를 발간하여 지역과 학교에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추진과정 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사업 안내서는 확대 과정에서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정하여 사업 추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단위의 평가를 통해 정책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 정책이 교육정책으로서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확대되면서 업무 부담의 과중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은 현장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전문가로서 학교에 배치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업무로 미뤄지는 경향이 조금씩 생겼다. 또한 사업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에 배치)와 프로젝트조장자(교육청에 배치)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자격 소지자들 중에서 복지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의 명칭을 '교육복지사'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무렵 교육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늘었다.

우리 원에서는 이 정책 사업의 확대 과정에서 기초 및 정책 연구, 사업 성과 분석 등 필요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외국의 교육안전망 사례 : 스웨덴·독일·영국·일본·미국(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2007)」,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계획 구체화 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2008)」, 「교육복지 지수 개발 및 DB 구축 방안 연구(2010)」 등),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무렵에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2011)」,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안 연구(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2011)», 「해외 교육복지정책 연구(2012)», 「교육복지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I)(II)(2013-2014)」 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확대 과정은 크게 시범사업, 전국 도시지역 확대, 전국 지역 확대 등 세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도시 저소득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출발하였다가 광역시, 전국의 도시로 확산되고, 이어 도시 기준도 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으로 확대 되고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정책 이름도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 1) 시범사업

이 정책 사업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등학교를 사업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학교 이전 단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범위가 넓어 거주하는 곳과 통학하는 학교 소재지의 일치를 전제하기 어렵다. 즉 고등학교가 사업 추진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거주지는 사업 추진 지역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 등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기 어려운 점이 예상되었다. 셋째, 고등학교는 행정 체계상 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시·도교육청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 체제를 갖추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시범사업을 마친 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지속되었다.

### 2) 전국 도시 지역 사업 확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호응과 의미 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의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공모제를 통하여 사업 지역<sup>61)</sup>을 확대하였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7개 지역이

61) 이 사업의 초기, '사업 지역'이란 사업이 추진되는 기본 단위로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접한 행정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여 4~6개 정도의 학교가 속하는 범위의 지역을 의미하였음. 이후 사업이 인구의 밀집성이 낮은 중소도시로 확대되며 지역은 인접한 행정동이 아닌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위치한 일정 범위 지역을 의미하게 됨. 지역이 광범위해지며 사업 출발 단계에서 부여하였던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정 범위의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의미는 약화되었음. 그러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연계하여야 할 대상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의 의미는 유지하였음.

선정되었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는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였다. 이로써 2005년에는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도입한 공모제의 경우 기본 사업 운영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이 사업을 2008년까지 중소 도시를 포함한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1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06년에는 30개 지역, 2007년에는 60개 지역,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확대 추세는 <표 IV-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2006년도까지는 행정동별, 학교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 학교로 하였다. 2007년에는 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7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모든 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 내 사업 대상 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과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평균 70명 이상 혹은 전체 학생의 10%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표 IV-4】 사업 지역, 학교·학생수

연도	'03~'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사업 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기존8, 신규7)	30지역 (기존15, 신규15)	60지역 (기존30, 신규30)	60지역 (기존6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00지역 (기존100)
도시 규모	-	특별시 광역시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모든 시	모든 시
학교수 (특교지원)	45교 (45교)	82교 (82교)	163교 (163교)	322교 (322교)	322교 (322교)	679교 (538교)	578교 (534교)
<시·도 자체 지원>	-	-	-	-	-	<141교>	<41교>
학생수 (기초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8명 (16,719명)	326,826명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081명 (40,275명)	452,467명 (35,725명)

※ 출처: 류방란 외(2011: 1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중단적 효과분석 연구(2차년도)

### 3) 전국적 확대와 시·도교육청 사업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2011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더욱 확대되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불리한 학생의 밀집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 초, 이 사업을 위한 교과부 훈령도 제정하였다. 사업비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초생활보장수급 학생 50명 이상인 학교당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2011년에는 1억 2천)을 교부하는 기준도 설정하였다. 종래 지역을 단위로 추진되던 사업 방식을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수준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바꾸었다. 사업 명칭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 추진 체제, 추진 방식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사업학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리 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변화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모델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시·도교육청과 현장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조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 라. 성과와 향후과제

### 1) 성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성과는 1) 학생의 성장, 학교 구성원의 만족, 2) 지역의 교육공동체 형성, 3) 정책의 분화와 파급 등 다차원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 □ 학생의 성장, 학교 구성원의 만족

우리 원에서는 꾸준히 현장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이 정책 사업 초기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는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자체 평가의 일환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사와 눈을 못 마주치던 학생이 눈을 마주치며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변화에 보람을 느꼈으며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안심하였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늘어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점차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종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 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니만큼 국회나 시·도의회 등에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를 추적하는 중단연구를 설계하였다. 사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에 이어 3년간의 중단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변화를 비사업 학교 유사한 조건의 학생들과 비교 분석하였다(「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단적 효과 분석연구(기초 연구,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2008, 2009, 2011, 2012)」). 중단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대되면서 비사업학교군의 학교들이 사업학교로 편입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석 결과 학습 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적게나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서·심리 발달 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효과 분석의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 □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이 정책 사업은 ‘지역’을 단위로 한 것이며,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학교와의 연계 협력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학교’라는 개념은 오래된 것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학교는 지역과 고립되어 교과 교육을 위주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교과 교육만으로 학생이 잘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교실 수업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학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가정에서의 돌봄과 지원,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 학교에서 이들에게 맞는 교육활동의 부족 등이 복합된다면 불리한 여건의 학생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리함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한 이 정책이 지속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학교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형화 해 제공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자신만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악구 지역 사례 연구(2007)」,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부천시 지역 사례 연구(2007)」,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해운대구 지역 사례 연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2007)」 등). 그 중 대표적인 몇 사례를 들어보면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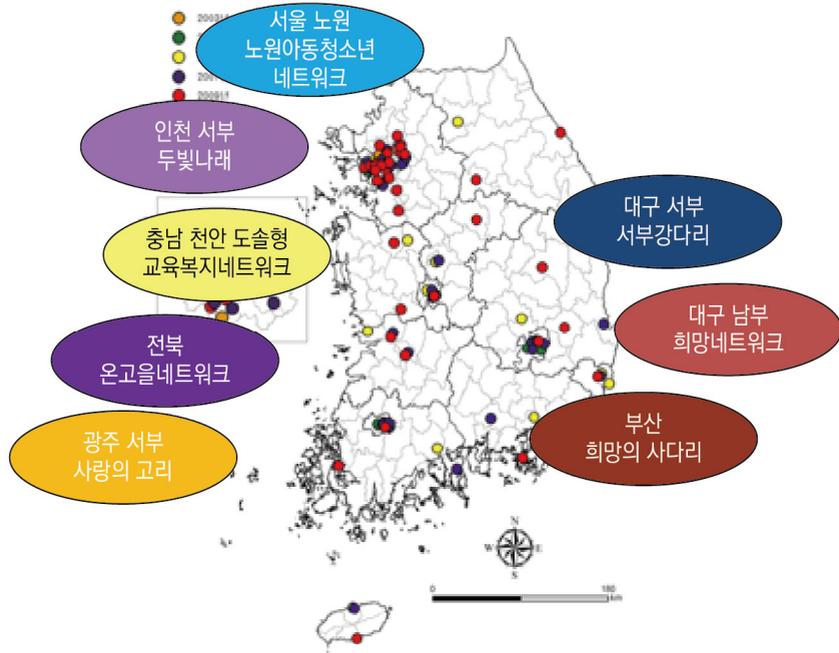


그림 IV-4 |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예(미간행 연수자료 중)

#### □ 분화와 파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어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이 사업이 초기에 성과를 거두면서 하위 영역들이 분화되어 독립적인 정책으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해 주는 기초학력부진 제로 정책, 학생들의 심리 정서에 특화되어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돌봄 교실 확대, 도서관 활성화 등이 제각기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화는 한편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지원하기보다 학생을 두고 사업 간 경쟁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부처에서도 지역 중심의 정책을 구상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부처나 시·도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확대·추진되는 데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 2) 향후 과제

우리 원에서는 2011년에 이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중앙연구지원센터 역할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4년 동안 이관 이후 현장 사업 안착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중앙연구지원센터 간판을 내렸다. 몇 년 후 교육부에서는 다시 이 사업을 지원할 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단독으로 응모하였던 한 대학의 중점연구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재난이 덮치면서 ‘격차’와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교육격차 해소(완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무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22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에 방점을 둔 교육안전망 정책 사업을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향후 교육안전망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과제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안전망 정책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교실 수업 이외에 부가적으로 학생을 지원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미 평생학습 사회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본다면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가 기본 학습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소홀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장을 돕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정책이 분화하면서 발전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두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원 정책, 위(Wee) 프로젝트, 방과후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제각기 추진될 것이 아니라 함께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공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 내 하위 조직 간 협력은 물론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다. 셋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가 사회적 가족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과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아울러 KEDI에서는 집단 간,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지역 중심의 정책 모델 정련화, 정책이 표적으로 삼는 저소득층 등 주변화되고 있는 여러 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책 과정 모니터링, 정책 효과 분석 등을 적절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혁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4.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사업<sup>62)</sup>

### 가. 사업 개요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고유의 일반사업으로서 매년 정부출연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선진화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시설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정책 지원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은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사업지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각종 매뉴얼, 가이드, 자료집 등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저변 확대와 고품격화를 위해 교육시설·환경 관련 다양한 이슈와 현안 중심의 교육시설 포럼을 매년 1회 이상씩 운영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인 OECD GNEELE(Group of National Experts o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참여 활동과 2006년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문교시설연구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최근 교육시설 정책 및 동향 세미나, 연구 및 사업 성과물 교류, 우수 학교시설 탐방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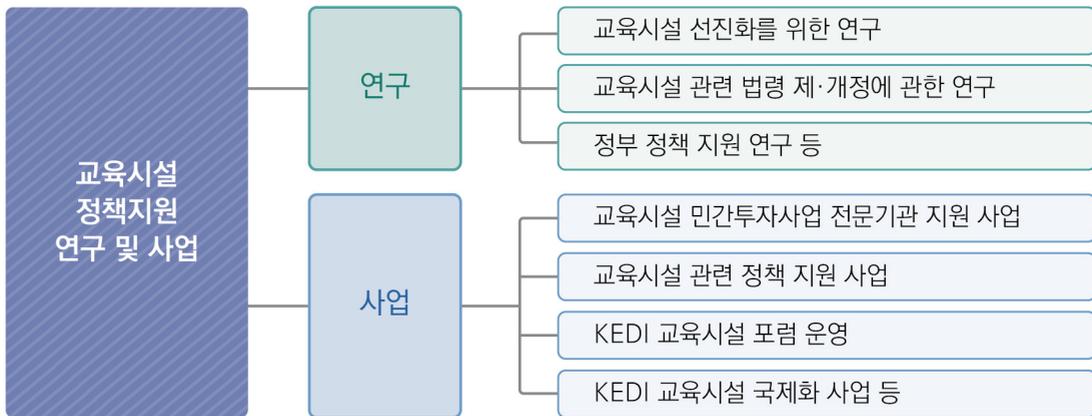


그림 IV-5 |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개요

62) 조진일(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집필

## 나. 도입 배경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은 2006년 5월에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약서’ 체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를 개소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교과교실제, 교육환경평가, 학교용지 및 무상공급, 학교시설 셉테드(CPTED), 학교안전,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명을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매년 수행하고 있다. 센터가 개소된 첫해에는 특별교부금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그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 정부출연금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센터 조직은 민자지원팀을 비롯한 총 5개 팀, 30여 명(2022.2.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추진 과정

연구과제는 첫째, 국내, 외 교육시설·환경 관련 최근 정책, 법령 및 각종 규정, 사회적·교육적·건축적 이슈 등의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이를 통해 과제를 발굴, 선정, 기획한 후, 셋째,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 실행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물은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성과를 보급, 확산하고 있다.



그림 IV-6 |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과제 추진 프로세스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은 사업 추진단계별 첫째,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등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둘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고시한다. 셋째, 주무관청에서 고시한 BTL사업에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넷째,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주무관청 간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여, 다섯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시협약(안)을 검토한다. 이후 준공시점에 적용한 물가 및 금리의 변동 등으로 재무모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지급금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림 IV-7 |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 지원 추진 프로세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주요 성과

2006년 교육부 수탁연구과제인 「교육환경개선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다음과 같이 교육시설·환경 관련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표 IV-5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실적(2007~2021년)

연도	주요 연구 실적
2007	친환경 교육시설 모형 개발 연구(1), (2), 한국 교육시설의 진단과 발전방향, 교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표준생애주기비용 산정 연구 등
2008	제로에너지·생태학교 모형 개발 연구(1), 교육시설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 연구, 교육환경 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등
2009	학교시설 교육효과 분석 연구, 교과교실 개선이 교수-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연구, BTL학교시설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 연구 등
2010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 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학교 및 학교 주변 섯패드 효과성 분석 연구, 유치원 표준 설계지침 개발 연구 등
2011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 개발 연구,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 지표 개발 연구, 특수학교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공립유치원 신설 소요 경비 연구 등
2012	한·일 초등학교 공간구성 비교 연구,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개발 연구, 농산어촌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인프라 복합화 방안 연구 등
2013	창의·인성교육을 고려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일 중학교의 공간구성 비교 연구,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 및 운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
2014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영상보안시스템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교과교실제 운영실태 조사 연구 등
2015	초등 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내진성능 통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 한·일 유치원 공간구성 비교 연구 등
2016	한·일 국립대학 시설 기준 및 캠퍼스 사례 비교 조사 연구,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 개발 등
2017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 그린스쿨 활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교과교실제 운영 공간 구성 적정성 검토 등

연도	주요 연구 실적
2018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방안/시설 규모 산정 연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데이터 활용 방안 등
2019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2),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2020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3), 학교공간혁신의 교육효과 분석 방안,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기준 및 가이드 개발 연구 등
2021	학교공간혁신의 교육효과 분석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뉴딜 연구,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

한편,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사업 성과로는 2006년부터 초·중등 학교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 지원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교육시설 민간투자 전문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문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1년	교과교실제 지원 전문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2014년	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용노동부)
2016년	학교시설 CPTED 전문 지원기관 지정(교육부)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교육 분야)전문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9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민간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교육부)
2020년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전문기관 지정(교육부)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전문 지원기관 지정(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2년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교육부)

그리고 2006년부터 교육시설정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시설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학교시설의 과거, 현재, 미래와 BTL”이라는 주제의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최근(2021) 제32차 교육시설 포럼(주제: “뉴 노멀 시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OECD CELE<sup>63)</sup> 회원국으로 컨퍼런스 및 회원국

**63)** CELE(Center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는 OECD 교육·기술부(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Innovation in Education)의 하위조직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2014년에 해체되었지만, CELE 명칭은 2018년 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2019년부터는 OECD GNEE로 운영되고 있음.

총회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OECD CELE-KOREA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는 센터 자발적으로 OECD GNEELE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와의 협약체결에 의해 2008년부터는 한·일 양국 간의 최근 교육 시설 정책 및 동향 소개와 세미나, 연구 및 사업성과물 교류, 우수 교육시설 탐방 등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정기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센터에서 수행해 오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업을 이관하였고, 2019년에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업무를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현, 지방교육재정연구원)’가 설립됨과 동시에 사업을 이관하였으며, 2020년에는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운영 지원 사업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관하였고, 2021년에는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Edubuil)사업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이관하는 등 교육 시설·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 2) 향후 전망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은 매년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사업으로써 향후 다음과 같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선진화와 민간투자사업의 고도화, 고품격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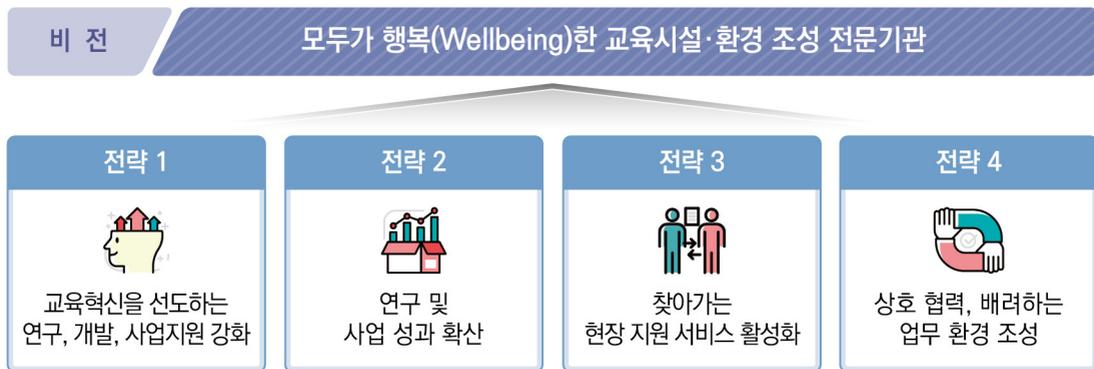


그림 IV-8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의 비전과 주요 전략

아울러 다음과 같은 국내외 교육시설·환경 관련 분야의 정책 동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가) 국내 정책동향 분석에 따른 능동적 대응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복합시설법」)이 제정·시행(2021.11.23.)되면서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예, 관련 연구 수행, 전문기관 지정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이 제정(2019.12.3.), 시행(2020.12.4.)되면서 동법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의거 교육시설 통계의 작성,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예, 관련 연구 수행, 전문기관 지정 등)
- 상기 동법 제26조의 2(사전기획)가 신설(2021.12.28./ 시행 2022.6.29.)되면서 사전기획 업무와 동법 제26조의 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이 신설(2021.12.28./ 시행 2022.6.29.)되면서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예, 관련 연구 수행, 전문기관 지정 등)과 더불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시행 2019.12.19.)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의무화에 따라 교육시설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조 19호에 따라 주무관청(교육부)의 장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 지속 및 향상
- 제1차 교육시설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등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추진 등에 따른 미래 학교 시설·환경 관련 정책동향 파악으로 연구 및 사업과제 발굴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 정교화를 위한 정책동향 파악으로 연구 및 사업과제 확대, 발굴 등

### 나) 국제 협력 강화 및 정책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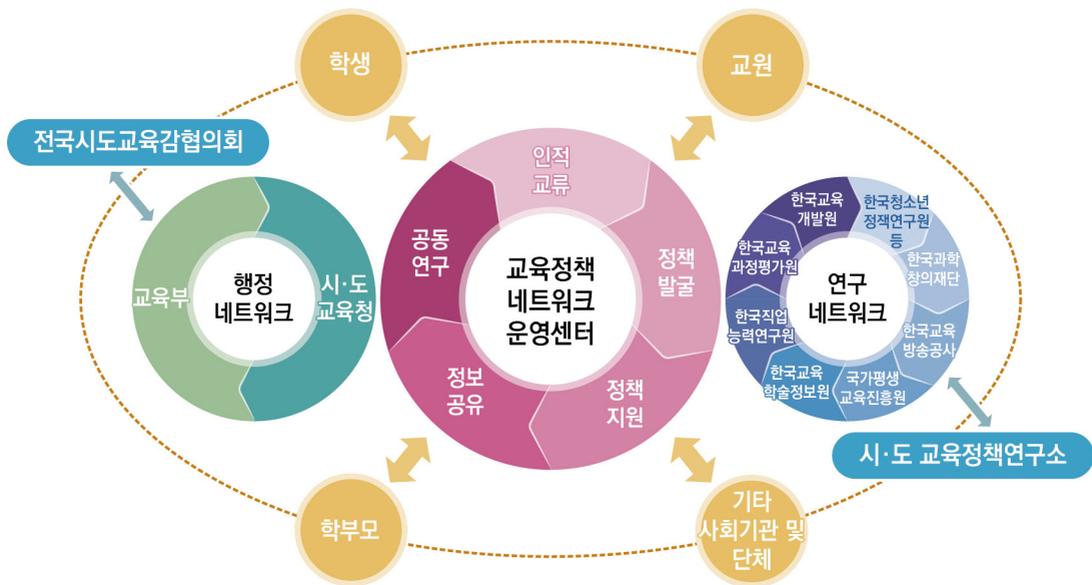
- OECD GNEELE 참여 활동을 통한 교육시설·환경 관련 국제 연구, 사업, 우수 사례 등의 국내 도입 및 시사 발굴
-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문교시설연구센터와의 한·일 교육시설 정기 교류 활동을 통한 연구, 사업, 우수 사례 등 정책동향 분석 등

이상과 같이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5.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sup>64)</sup>

### 가. 사업 개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교육부훈령 제79호 제2조)로,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의 현장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 교육정책 흐름선도 및 교육현안예의 능동적 대응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출처: 임소현 외(2020). 교육정책네트워크 재구조화 및 발전 방안. p.110.

【그림 IV-9】 교육정책네트워크 개념도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허브로서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교육정책네트워크는 행정 네트워크(교육부, 시·도교육청)와 연구 네트워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아정책연구소 등)의 2차원으로 구축·운영한다. 또한, 추진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학생, 학부모, 교원, 기타 사회기관 및 단체 등과 능동적으로 연계·협력하고 있다.

64) 임소현(교육데이터연구본부장)·황준성(교육현장연구본부장) 집필

## 나. 도입 배경

2002년부터 구축·운영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자율화 및 교육자치 기조의 확산으로 지방교육 행정의 역량 강화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간 정책적 조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정책추진 및 집행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협력체제(네트워크) 구축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도 증가하여 지역, 국가, 세계적(Local-National-Global) 수준에서의 최신 교육동향 및 성공사례 등 교육정보에 대한 적시 확보 및 공유 요구가 증대되었고, 교육정책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구·분석의 필요도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도입 배경이다. 아울러 교육정책 관련자들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대상 집단의 신뢰 제고 및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교원,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이해 증진의 필요성도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다. 추진 과정<sup>65)</sup>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002년 10월,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일명 ‘ER&D Network’)라는 명칭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정책포럼 발간을 시작으로 교육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이슈페이퍼 등이 발간되었으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인 ‘교육정책정보센터(www.edpolicy.net)’를 통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제공하였다. 교육정책정보센터는 2004년 11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現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공공기관 교육·학술 분야 품질 우수 DB’로 선정된 바 있다.

2006년 5월,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보다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97호, 2006.5.15)을 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유관연구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로서의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이 규정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운영센터’를 공식적으로 설치하였다(2007.1).

65) 홍영란 외(2017) 및 황준성(2016)에서 인용

2007년 교육부-연구기관-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 2008년 ER&D Network 지역 싱크탱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 중앙과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2009년 9월에는 시·도교육청 참여를 공식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2010년부터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재원과 별도로 시·도교육청 분담금을 제도화하였고, 사업의 명칭을 현재의 '교육정책네트워크'로 개정하였다(훈령개정, 2010.06.30).

이후, 교육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운영에서 시·도교육청의 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확대되면서 현재의 교육정책네트워크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교육부 재원이 민간보조금에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금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의 추진과정을 거쳐 구축된 현행의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이다(교육부훈령 제79호 제2조).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b). 2022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실행계획서.

■ 그림 IV-10 ■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체계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2002년부터 20년 동안 추진되어온 교육정책네트워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적 장기사업이다. 현재의 모습을 구축하기까지 다양한 발전적 변화가 있었으며,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어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교육정책의 교육현장으로의 성공적 착근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그 간의 성과를 2020년 수행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재구조화 및 발전방안」(임소현 외, 2020)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관련 유관기관이 수평적 관계 하에서 국가와 지역의 교육현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 결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집행, 연구기관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교육현장으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정책 발굴을 지원하였다. 셋째, 교육계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마련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 제고와 이를 통한 현실적인 교육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교육정책의 교육현장으로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지원하였다.

【표 IV-6】 2002~2021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 성과

영역	성과
정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장관-연구기관장 교육정책협의회 개최('02~'09: 총 10회)</li> <li>· <b>교육정책협의회</b>(구 실·국장협의회, 책임관회의) 개최('10~'21: 총 21회)</li> <li>· 교육정책협의회 유관기관 담당자회의 개최('02~'18: 총 20회)</li> <li>· <b>교육정책협의회 담당자협의회</b>(구 실무회의) 개최('02~'21: 총 93회)</li> <li>· 교육정책연구협의회(구 월례토론회) 개최('10~'20: 총 71회)</li> <li>· <b>교육정책 워크숍</b>(구 브라운백 미팅) 개최('16~'21: 총 70회)</li> </ul>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정책개선·선도연구</b>(구 교육현장지원연구) 수행('03~'21: 총 96건)</li> <li>· <b>교육정책개선·선도연구 결과발표회</b> 개최('10~'21: 총 12회)</li> <li>· 주요 교육정책 현안관련 심층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정책 토론회</b>(구 행복교육현장토론회) 개최('10~'21: 총 104회)</li> <li>- 교육정책네트워크 정책워크숍(구 연계워크숍) 개최('11~'18: 총 18회)</li> <li>- 교육현안 세미나 개최('03: 총 8회)</li> <li>- 교육정책과제 토론회 개최('04~'07: 총 28회)</li> </ul> </li> </ul>

영역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교육포럼 개최('07: 총 4회)</li> <li>- 네트워크 콜로키움 개최('09: 총 3회)</li> <li>• 교육정책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 컨설팅 수행('10~'20, 41식)</li> <li>- 공교육내실화 지원 사업 수행(교육현안 모니터링 등)('03~'05, '15~'16)</li> <li>- 국내·외 우수교육현장 탐방 프로그램 수행('03~'19: 총 19식)</li> <li>- 교육 인적 자원 정책 사례 분석 수행('07)</li> <li>- <b>교육정책네트워크 POLL 운영('21)</b></li> </ul> </li> </ul>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 <b>교육정책포럼</b> 발간('02~'21: 총 342호)</li> <li>• <b>메일진 해외교육동향</b> 발간('06~'21: 총 414호)</li> <li>• <b>교육현안보고서</b>(구 이슈페이퍼,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발간('04~'21: 총 255종)</li> <li>• <b>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b> 구축 및 운영('03~)</li> <li>• <b>카카오톡 채널 &lt;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동향&gt;</b> 운영('19~)</li> <li>• 교육연구개발 성과, 교육정책추진학교 등 DB화 및 제공('10~'16)</li> <li>• 교육정책 통계자료집 발간 및 DB 제공('04~'11)</li> <li>• 교육백서 발간('05, '07)</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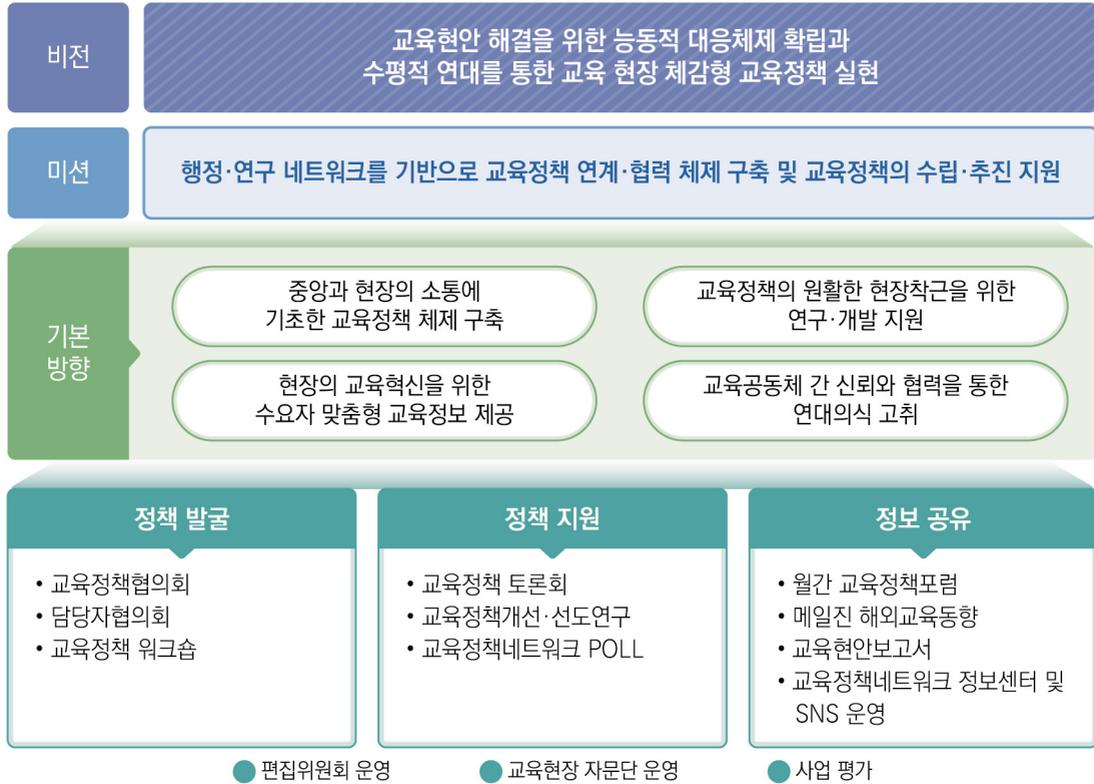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b). 2022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실행계획서.

\* 굵은 글자는 현행 추진 과제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정책네트워크는 '행정·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정책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교육정책의 수립·추진 지원'을 미션으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능동적 대응체제 확립과 수평적 연대를 통한 교육현장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의 실현을 위해 ① 중앙과 현장의 소통에 기초한 교육정책 체제 구축, ② 교육정책의 원활한 현장착근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③ 현장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 ④ 교육공동체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연대의식 고취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 강화와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등으로 교육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재편이 예견되고 있어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관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중심의 협의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자 대상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통해 현장성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여 각계각층 국민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선도하여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외연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임소현 외(2020). 교육정책네트워크 재구조화 및 발전 방안. p.124. 재구성.

【그림 IV-11】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비전, 미션, 기본방향 및 사업 영역

## 6. 교육통계사업<sup>66)</sup>

### 가. 사업 개요

교육통계사업은 1,000여 종의 국가 승인 통계 중 사회 분야의 핵심적인 통계 사업으로 1962년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 역사와 명맥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는 2017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어 국가적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통계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기초연구, 통계조사, 분석서비스, 시스템개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사업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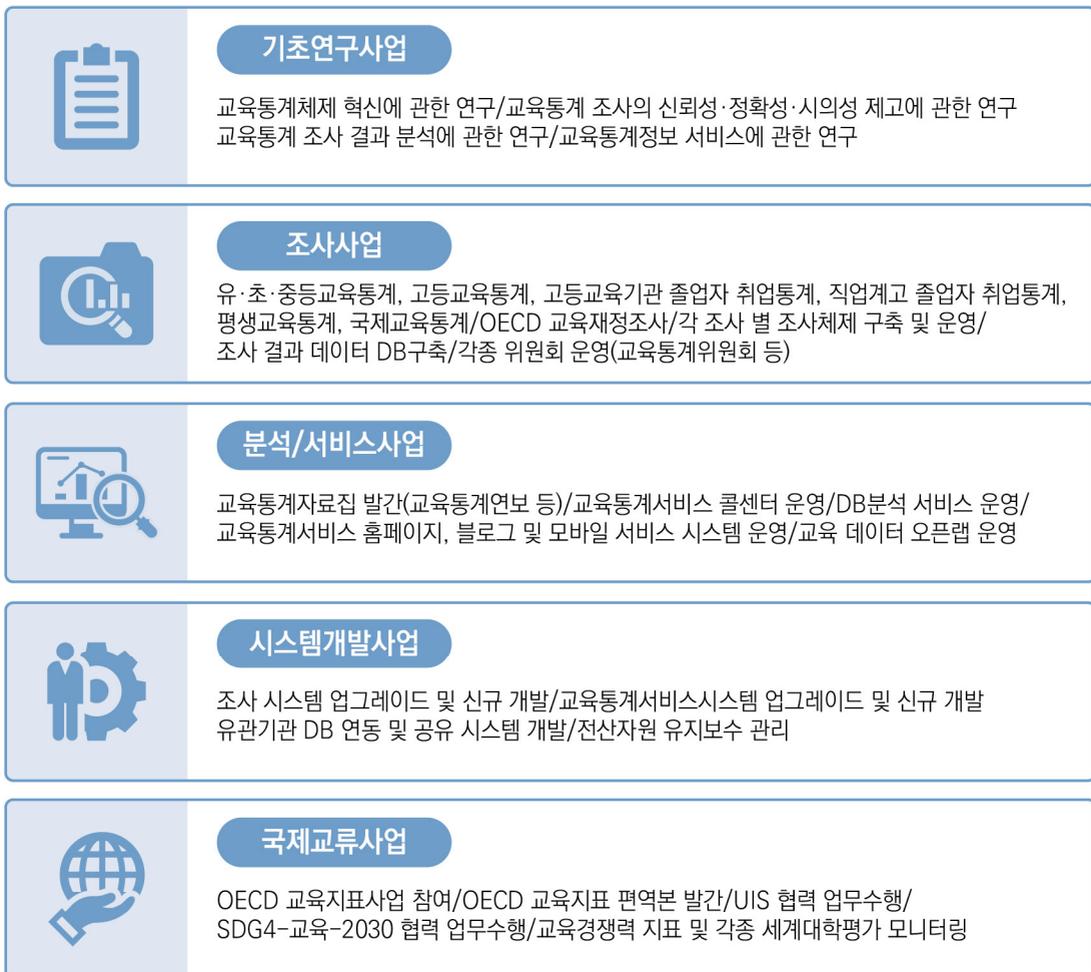
교육통계는 다음과 같은 사업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 교육통계조사 관련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 개정
  - 「교육기본법」제26조의3, 「유아교육법」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각 법 시행령
- 「통계법」(2020.06.09., 법률 제17339호)
  - 교육통계조사(지정통계): 통계청 승인 제334001호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일반통계): 통계청 승인 제920024호
  - 평생교육통계(일반통계): 통계청 승인 제334006호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일반통계): 통계청 승인 제334009호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60호)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사업」 민간위탁 협약(2020.3.1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사업」 사무편람 교육부 승인(2021.6.16.)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민간위탁 협약(2020.3.1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사무편람 교육부 승인(2021.03.18.)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민간위탁 협약(2020.3.1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법」 제18조(2020.06.04., 법률 제16677호)
- OECD에 관한 협약(1996.12.12., 조약 제1358호)
- UNESCO 교육통계 협력기관 지정 알림(2012.12.1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2035호)

66) 강성국(교육통계센터 소장) 집필

## 2) 사업목적

교육통계사업은 1) 교육통계 조사 및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를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 생산, 2) 과학적 정책 수립·평가와 교육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통계 분석자료의 산출 및 제공, 3)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자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4) 통계정보의 질적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 연구, 5) 국제기구와의 각종 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Ⅰ 그림 IV-12 Ⅰ 교육통계 주요 사업

### 3) 추진체계

교육통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통계청과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통계사업계획을 승인을 통해 추진된다. 전국 2만여 유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정보를 수합 및 검증하여 교육통계DB를 구축하고 통계조사 결과를 매년 공표하게 된다. 구축된 통계DB를 활용하여 통계연보(교육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를 비롯한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고,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 4) 주요 세부 사업 소개

#### □ 유초중등교육 기본통계조사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는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의 각급 학교들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약 20,000여 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학생, 교직원, 시설,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수 조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교육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정보공시·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원천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언론보도를 통한 조사결과 공표, 각종 교육통계 자료집 발간, 대내외 자료 제공 서비스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 고등교육 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는 전국의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교육현황의 진단, 정책 수립 및 각종 대학평가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정보공시에도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약 55만여 명의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DB, 국세DB 등 공공 DB 연계 조사와 연계되지 않은 졸업자의 현황 조사를 위한 대학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연 7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형식검증, 내용검증, 대학 자체점검 등을 통한 상세점검과 공공DB연계 검증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계기관 확대를 통해 대학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시각화 분석자료 및 데이터로 일선 대학의 진로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고, 개인별 진로 추천 및 컨설팅을 위해 진로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17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18년도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체제를 구축하였다. 2020년도에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업무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되었고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전환되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첫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 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교육통계는 2007년부터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약 4,500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등을 파악하는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만 25~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활동 내용, 불참요인 및 접근성 등에 대한 표본조사(약 9,600명)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 교육통계 콜센터, 모바일 앱, 블로그 및 각종 국가 및 유관 기관 사이트 탑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통계 활용도 확대를 위한 교육통계 콘텐츠 제작 및 간행물 발간 업무를 통해 조사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교별/학과별 자료 제공 서비스, 주제별 쟁점을 발굴하여 맞춤형 자료 제공 항목을 확대해왔다.

### 나. 도입 배경

증거 및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활용되는 교육통계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 요소인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핵심 데이터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육통계사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많은 통계와 데이

터를 생산하고, 교육 연구와 교육 산업에 활용을 위한 통계 서비스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온 교육통계사업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교육통계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교육통계사업이 이관되면서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 다. 추진 과정

교육통계사업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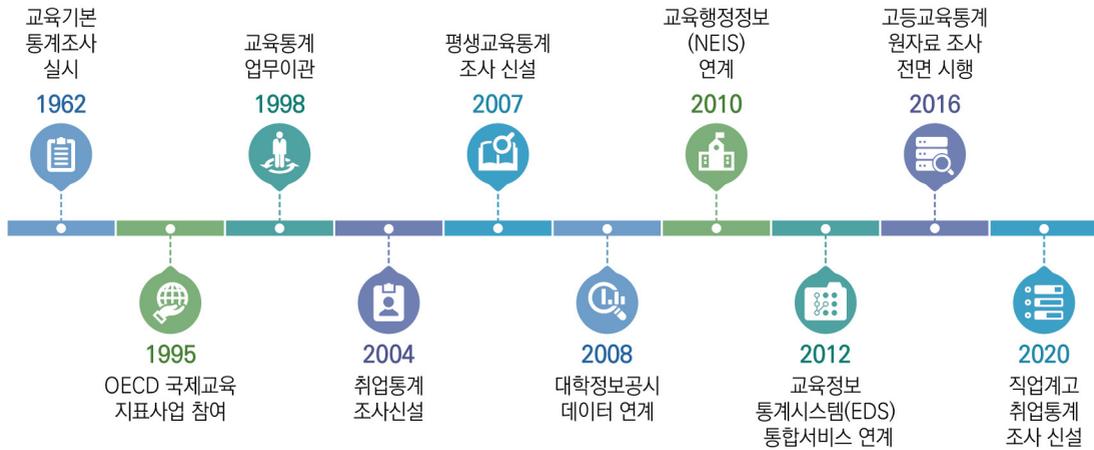


그림 IV-13 | 교육통계사업 주요 연혁

표 IV-7 | 교육통계사업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60년대	1962.01 국립교육평가원 주관 교육통계연보 등 발간사업 추진
1990년대	1995.01 OECD 국제교육지표(INES)의 국내조정관 역할 수행
	1998.01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사업 이관 및 센터 설립
2000년대	1999.11 웹 활용 교육통계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2004.0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실시
	2006.03 교육인적자원통계협력망 운영
2010년대	2007.01 고등교육통계 통합 조사 실시, 평생교육통계 조사 실시
	2010.04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한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 시행
	2010.06 건강보험 DB 연계 기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실시
	2011.04 고등교육기관 교원 하반기 조사 시행
	2011.10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 확대

시기	내용
2011.12	국세 DB 연계 취업통계 추가 조사 시행
2012.11	통계청 주관 통계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2013.12	교육통계서비스 개편 및 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4.10	시·도분담금 사업 시행, 학교교육통계조사 시행, 교육통계모바일 서비스 실시
2015.10	고등교육통계 1차 고도화 조사 수행
2016.10	고등교육통계 2차 고도화 조사 수행
2017.06	교육기본통계조사 근거법령 및 시행령 개정,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2018.10	유초중등통계 유치원 조사 하반기 시행
2020년대	2020.0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행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주요 성과

#### □ 유초중등교육 기본통계조사

2017년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C/S 프로그램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유·초·중등 교육통계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육행정정보들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나이스에 교육통계 연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 정보공시, 특수교육통계, 다문화 학생 현황 조사 등 다른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복조사를 교육통계 조사로 일원화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공헌하였다. 지역통계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도별 교육통계 결과 활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 및 통계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연수를 진행 중이다.

#### □ 고등교육 기본통계조사

대학 및 대학원 전반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계법 이외에 명확한 법적 기반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1998년 C/S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2001년부터 웹 기반 시스템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별단위 자료를 수합하는 C/S 환경의 고도화조사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조사를 상반기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부터는 대학정보공시에 자료를 연계하여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대졸자의 취업 또는 진학 등의 졸업 후 상황을 전수 조사하는 유일한 통계로 청년층 취업 정책 수립 및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생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첫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대학 직접 조사에서 공공DB연계조사 병행으로 개선되었으며, 2020년 진학자DB 구축을 위한 신입생정보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더불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취업통계는 취업률, 진학률과 같은 양적 취업통계 외에도 급여수준, 취업준비 기간 등과 같은 질적 취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과 협업하여 3년간의 일자리 이동현황을 확인하는 일자리 이동통계를 개발하였고, 취업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졸업자의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진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020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다른 교육통계 조사와 달리 학교입력조사가 아닌 공공DB연계를 통해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DB, 고용보험DB 등 17개 공공DB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공공DB 연계를 확대(23개 공공DB)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학교 조사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할 수 있었다.

### □ 평생교육통계조사

2007년부터 평생교육법 18조를 근거로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법(2021.06) 및 동법 시행령(2021.12) 개정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어 평생교육통계조사 위탁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평생교육통계 품질 개선을 위해 조사대상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와 통계청 '표준교육분류(영역)' 간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계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2021년 통계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통계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 □ 교육통계서비스

1998년 교육통계 DB가 구축된 이후 1999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교육통계 블로그 개설, 2013년 교육통계서비스 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4년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며 교육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편해 왔다. 2019년에는 데이터 활용 및 제공 확대를 위해 교육통계 데이터 오픈 랩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통계 결과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통계조사 주요 결과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교육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정부·공공기관·지자체·연구기관·언론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통계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제공·안내·서비스하고 있다.

## 2) 향후 전망

### □ 유초중등교육기본통계조사

유초중등교육통계는 현재 지능형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나이스 교육통계조사 시스템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어 자료 연계 활용 프로세스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복조사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과의 자료 연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통계조사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한 자료와의 연계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 및 교원의 종단자료 구축으로 고등-평생-직업교육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통계 생산과 교원 및 학생의 이력 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인정보 기반조사로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조사체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취업통계-고등통계 간 데이터 연계방안 검토 및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진로정보시스템의 지속적 활용·제공을 위한 추가기반 마련을 위해 졸업자의 다양한 특성정보와 취업정보 수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진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을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재학생이나 대입준비생까지 확대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다.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통계정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공공DB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연계되는 공공DB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추진해야 하며 미취업자로 구분되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공DB 연계를 통해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DB 연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직업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취업통계정보와 대학의 취업통계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정보의 유형으로는 취업자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자 정보와 기타 취업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정성 정보를 포함해서 취업통계 통합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평생교육통계조사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국가통계로서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화된 조사시스템(소프트웨어)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해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것이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시·도별 평생학습실태 세부결과로 맞춤형 평생학습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하도록 표본을 확대(1만 명→3만 명)할 예정이다.

####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통계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통계 데이터의 지속적 확대·개방 및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 공개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통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편의 및 자율성에 기반한 자료제공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통계서비스는 교육통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간행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7.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sup>67)</sup>

### 가. 사업 개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은 대학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은 2015년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이후 2018년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및 진단 사이에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본 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리 규정’(교육부 훈령 제380호)에 따라 평가·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나. 도입 배경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운영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2014a)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 기본정책 방향인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교육부, 2013)에 더해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대학 현장의 주요 의견은 “정부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 “정원감축 방법 및 관련제도 개선”, “대학 평가체제 개선”, “사학의 퇴출경로 마련” 등으로 수렴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1)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대상 정원감축 실시, 2)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3) 지속적·체계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2014a)을 발표하였다.

특히 당시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조치를 구조개혁 평가와 병합하면서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대학평가체제로의 전면개편”을 예고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2018년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후속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4년 당시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전문수행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지정(2014.6.)하였으며, 이후 관련된 후속 진단·평가 및 컨설팅 등이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교육부, 2014b).

67) 백승주(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 집필

## 다. 추진 과정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은 2015년 시작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3년을 주기로 진단 및 평가, 후속 컨설팅, 차기 진단평가 체제 개발 업무를 지속해오고 있다.<sup>68)</sup>

### □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2015년~2017년)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15년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는 일반대 163개교, 전문대 135개교가 참가하였다. 2016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 98개교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수행을 위해 대학평가본부를 신설하였으며, 하위부서로 평가지표 및 편람 개발,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평가연구기획실과 평가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는 대학평가운영실을 설치·운영하였다.

### □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2018년~2020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특히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가능 범위를 달리 적용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일반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33개교가 참여하였다. 2019년 맞춤형 컨설팅은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이 원하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하여 희망대상을 대학으로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학의 수요에 맞춰 집중적인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2019년 맞춤형 컨설팅에는 일반대학 39개교, 전문대학 43개교가 참여하였다. 2020년 보완평가는 2018년 진단 이후 지속적인 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한 대학에 대한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노력을 점검하여 재정지원제한 조치 해제를 결정하였다. 2020년 보완평가에는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5개교가 참여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추진 목적에 맞춰 기존의 대학평가본부를 대학역량진단센터로 개편하였으며, 센터 하위조직으로 정량팀, 정성팀, 운영·DB팀, 위원 및 성과확산 팀을 구성하여 진단 및 대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68)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것은 2014년 6월이지만 이하에서는 주요 평가 및 진단 주기에 따라 기술하였음을 미리 밝힘. 또한 각각의 평가 및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9>를 참조하기 바람.

## □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2021년~현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 기조를 완화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방향 하에 수행되었다. 동시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현장에 입학자원 감소라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등 진단 체제 전반의 변화를 꾀하였다. 특히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해 진단 결과에 따른 인위적인 정원감축 기조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체 계획에 의한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평가 체제를 완화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병합되어 진행되어온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다시 분리·실시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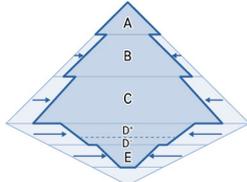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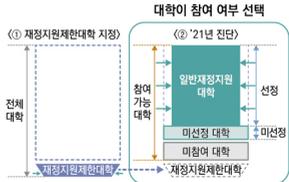
2021년 진단에는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가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면 진단을 전면 비대면 온라인 진단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평가운영의 변화도 있었다. 후속조치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표 IV-8】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주요 수행 내역

수행기간	주요 내용
2015~2017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li> <li>· (2015~2016) 하위등급 대학(D, E 등급, 66교) 맞춤형 컨설팅</li> <li>· (2016) 평가제외 대학, 별도조치 대학 컨설팅</li> <li>·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li> <li>· (2017) 상위등급대학 컨설팅</li> </ul>
2018~2020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li> <li>· (2019)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li> <li>· (2020)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소규모 대학 컨설팅</li> <li>· (2020) 보완평가</li> </ul>
2021~현재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li> <li>· (202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li> <li>· (2022)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li> <li>· (2022)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li> <li>· (202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맞춤형 컨설팅(예정)</li> </ul>

※ 출처: 남신동 외(2020)의 <표 III-7>에 교육부(2017), 교육부(2019)의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함.

【표 IV-9】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개관

구분	(1주기) '15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4.12)	(2주기)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2017.12)	(3주기)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2019.12)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교육의 여건 및 질 제고</li> <li>·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비 → 입학정원 감축</li> <li>· 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 선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교육의 여건 및 질 제고</li> <li>·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비 → 입학정원 감축</li> <li>· 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 선택 지원</li> <li>· 다양한 특수목적 사업 통합 및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자율성 존중 →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한 적정 규모화 추진</li> <li>→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교육의 질 제고</li> <li>· 지역대학 배려 강화</li> <li>·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li> </ul>	
정책 수단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가능/제한)</li> <li>· 국가장학금(가능/제한)</li> <li>· 정부재정지원(가능/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가능/제한)</li> <li>· 국가장학금(가능/제한)</li> <li>· 일반재정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재정지원 가능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일반재정지원 대학 지정 수단 분리</li> </ul>
	평가 모델	· 체제적/실증주의 접근	· 체제적/실증주의 접근	· 체제적/실증주의 접근
	주체	· 제3자(정부주도/KEDI 위탁)	· 제3자(정부주도/KEDI 위탁)	· 제3자(정부주도/KEDI 위탁) → 대학이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 + 정성 지표</li> <li>*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수업관리(강의규모, 시간강사 보수수준), 장학금 지급율, 총원율(신입생, 졸업생), 취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 + 정성 지표</li> <li>*[신규]학교 법인의 책무성 및 구성원의 참여·소통 지표, 지역사회협력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 + 정성 지표</li> <li>*[시간간소화] 교사확보율, 장학금 지원 지표 삭제,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지역사회협력·기여 지표를 발전계획의 성과로 통합</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지표: 1·2단계 구분(서면, 대면 및 현장방문)</li> <li>· 정량지표 점수산출 합산</li> <li>· 평가위원 공모·위촉(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지표: 1·2단계 구분(서면, 대면 및 현장방문)</li> <li>· 정량지표 점수산출 합산</li> <li>· 평가위원 공모·위촉(정성)</li> <li>· 부정·비리 제재 대상 확대 및 감점 기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지표: 단단계 평가(서면, 대면)</li> <li>· 정량지표 점수산출 합산</li> <li>· 평가위원 공모·위촉(정성)</li> <li>· 부정·비리 제재 대상 확대 및 감점 기준 강화</li> </ul>	
결과 활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적, 적극적 정원감축 실시</li> <li>*A등급을 제외한 84% 대학 정원감축 권고(4만명)</li> <li>· 모든 대학을 전국 단위로 6등급으로 구분</li> <li>·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적 정원감축 실시</li> <li>*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1만명)</li> <li>· 일정 수준(60% 내외)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권고 없이 일반 재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의 기능 재정립</li> <li>*21년 진단 결과는 일반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및 컨설팅 지원에 활용</li> <li>*재정지원제한대학 별도 지정</li> <li>· 정부주도의 정원 조정 기제</li> </ul>	

구분	(1주기) '15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4.12)	(2주기)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2017.12)	(3주기)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2019.12)
	정원 감축 실적 반영 · 모든 대학 대상 절대평가 실시, 5등급 분류(평가 후 6등급)	지원(3년)	삭제 → 유치총원을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 규모화 유도
비고 (정책적 고려사항 등)	· 하위대학 맞춤형 컨설팅 및 이행점검으로 재정지원제한 해제 기회 부여('16~'17)	· 자율개선 대학 선정시 권역별 균형 고려(지역5:전국1) · 대학별 진단결과 세부 사항 공개 및 맞춤형 컨설팅 등 결과 활용 및 환류 사업 내역 신설	·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시 지역 대학 배려 강화(지역9:전국1) · 대학별 진단결과 세부 사항 공개 범위 확대(비교정보 제공) · 맞춤형 컨설팅 지속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의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매개로 우리사회의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진단·평가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다. 이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고유 연구의 선순환 체제가 구축된 결과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경험을 토대로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 진단체제 발전 방안(남신동 외, 2020),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임후남 외, 2017),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방안 연구(김기수 외, 2016) 등의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기본연구가 차기 진단과 평가의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등 연구의 정책화 실적에 높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둘째는 2015년부터 지속된 대학 평가 및 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평가 운영 체제의 본보기 상을 정립하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국가 단위 진단과 평가라는 부담 속에서도 평가의 공정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평가 부담 감소를 위한 장치가 동시에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진단·평가 시스템, 온라인 보고서 작성·제출·검수 시스템 등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등 국가 단위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셋째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대학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진단에 참여한 대학에게 정량지표의 6년간의 시계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량·정성 지표의 평가 요소 단위에서의 전국, 설립유형, 권역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학의 자체적인 자율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별 대학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재정분석보고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학 상황에 맞춘 분석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은 2024년 이후 시행될 차기 진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차기 진단의 시행여부와 방식, 지표 등에 대한 대학 현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단·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학역량진단센터 역시 우리 사회 고등교육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기 진단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 현장의 수용성 높은 차기 진단 모형과 사업 설계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율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외연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진단 및 평가뿐만 아니라 진단 자료와 정보를 상시적으로 대학에 제공하고, 보다 풍부한 맞춤형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에 터한 우리 대학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8.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sup>69)</sup>

### 가. 사업 개요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은 현재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무가 지방 이양된 이후에, 학교 및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현장 맞춤형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온종일 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착근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주관교육청)과 협약 체결 후,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KEDI 방과후돌봄연구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매년 6억 8천만 원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 수립을 위한 think-th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의 주요 영역 및 과제는 1) 선도적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모델 개발 및 성과분석, 2) 시·도교육청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유관기관 연계협력

69) 이희현(학교교육연구실) 집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전담인력 연수과정 운영, 4)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이다. 특히, 사회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을 통해 중앙차원에서 시·도교육청 공통의 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지역 맞춤형 방과후학교·돌봄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질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IV-14 ■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의 개요

### 나.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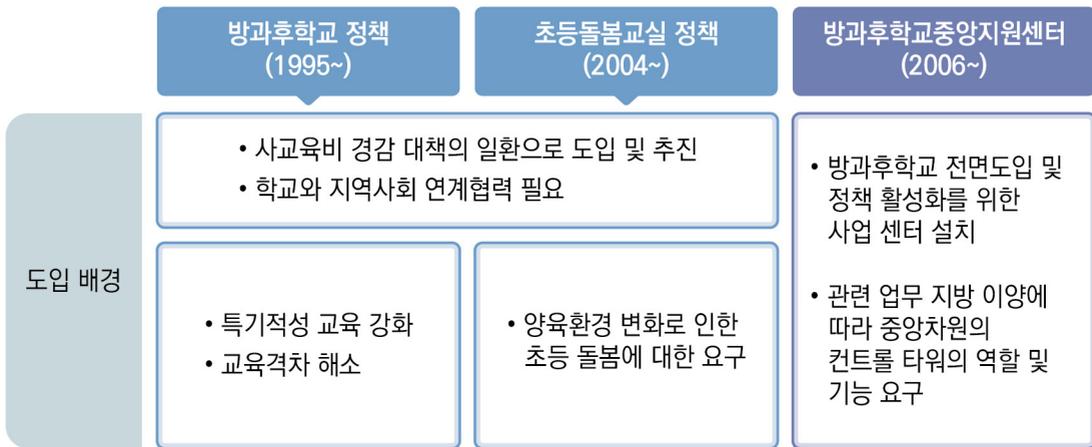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등이 도입 배경으로 강조되고 있다(이희현 외, 2019). 구체적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교육활동' 도입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1996년 각급 학교에서 개인의 소질·적성·

IV  
KEDI 주요 사업성과

특기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방과후교육활동을 운영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조한 바 있으며, 2004년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해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제시되었고 2005년에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보육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방과후학교를 도입하면서 사교육 수요의 흡수를 강조한 바 있으며, 방과후학교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이희현 외, 2021).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해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로 도입된 이후, 2010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 전면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후에는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초등돌봄에 대한 요구 증가, 돌봄 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사회의 연계·협력 등이 초등돌봄교실 도입 배경으로 강조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한편,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방과후학교의 정책 수립 및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지원사업팀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였다. 이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중앙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컨트롤타워의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12년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를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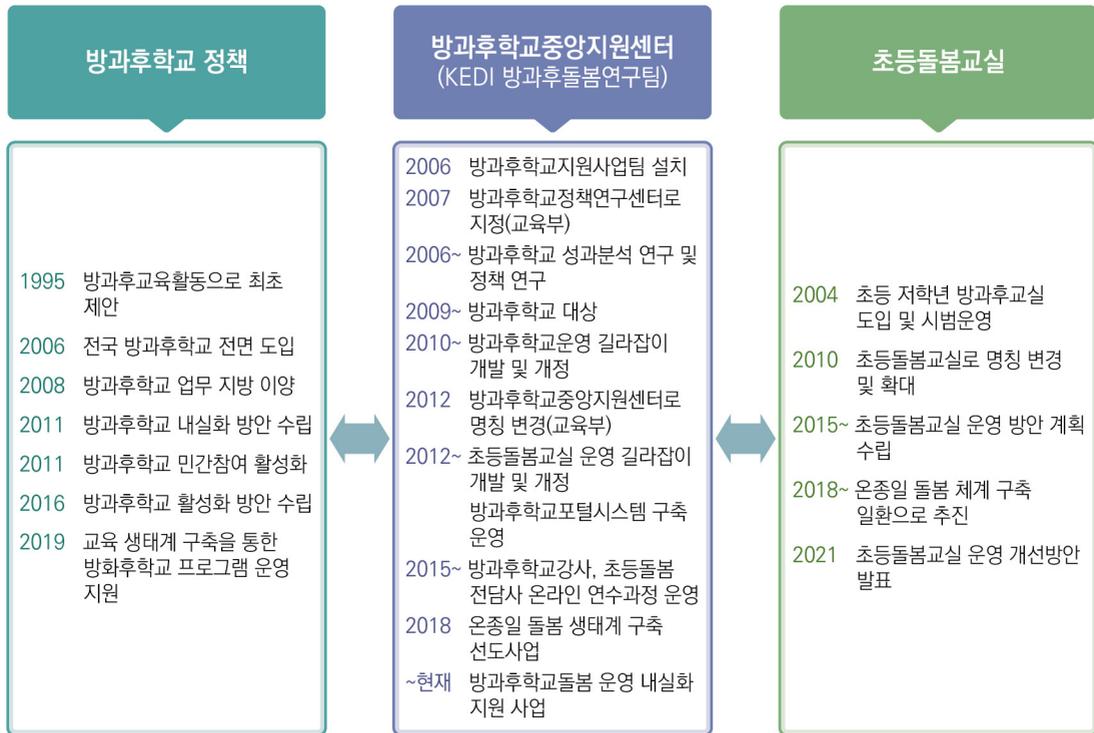
【그림 IV-15】 정책 및 사업 센터의 도입 배경

## 다. 추진 과정

먼저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교육개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교육활동의 일환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제안되었고, 이후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6년 2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업무는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으나, 정부는 2011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수립’, 2016년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발표된 이후에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을 통해서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로 도입되어 시범·운영되었으며 2010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2014년부터 전면 확대되었다. 이후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매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발표된 이후에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돌봄 담당교사 업무 경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초·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성과 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수립 및 과제 발굴을 선도하였다. 이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물론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수행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정책화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2009년에는 학교현장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과후학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제12회 방과후학교대상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전국 공통 기준인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국 공통 기준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여 중앙차원에서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방과후학교·돌봄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을 시작하여 관련 정보 공유 및 확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공유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IV-16】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정책 선도 및 제도 개선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지정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로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 수립 및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성과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60여 건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성과분석 관련 연구는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김홍원 외, 2006),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안」(이희현 외, 2019) 등 10건, 2)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김홍원 외, 2007), 「민간참여 방과후학교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김수동 외, 2013),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 방안 연구」(박승재 외, 2017),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이희현 외, 2019) 등 39건, 3) 초등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 관련 연구는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김홍원 외,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적정기준 개발」(박승재 외, 2017),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장명림 외, 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이희현 외, 2021) 등 9건이다.

또한 2015년에는 ‘방과후학교 정책포럼’을 통해 방과후학교 발전 과정과 미래 탐색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7년에는 ‘International forum on After-School’를 개최하여 세계 방과후학교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미래 전략을 탐색한 바 있다.

향후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변화 측면에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화를 모색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및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비전 및 방향을 재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질 관리

한국교육개발원은 그간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의 연구사업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중앙차원의 공통 기준인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개발·개정하고,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앙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2010년부터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12년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매뉴얼(2009)」,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길라잡이(2015)」,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운영 매뉴얼(2015)」,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업무 매뉴얼(2020)」등 정책 환경 변화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중앙차원의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중앙컨설팅단 운영(2006~2007)’, ‘지자체 교육청 공동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컨설팅(2010~2012)’,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담당자 워크숍(2012)’,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부처공동 워크숍(2014~2017)’,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컨설팅(2019)’ 등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 및 질 관리는 물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중앙차원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격차의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9.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sup>70)</sup>

### 가. 사업 개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의 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력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 당시,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연구를 위탁 하면서 출발하였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근거하여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교육방법을 활용해 정규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는 학교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가 공립 중·고등학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은 이러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역사와 함께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방송중·고운영센터는 학교가 설치된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법·제도·교육과정·수업·학사운영 등 학교 설치·운영과 관련한 연구 및 전반적인 학교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및 현장 교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방송중·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 심의 및 예·결산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및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 나. 도입 배경

학교 교육 기회를 받기 어려웠던 1970년대 초반, 고등학교 학력 미소지로 인하여 학력에 대한 ‘한(恨)’을 가슴 속에 안고 있던 중장년층에게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1970년대를 거치면서 라디오 방송이 본격적으로 대중화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를 통한 원격교육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방송·정보통신교육을 통해 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진학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들에게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의 학업 지속 기회 제공에 대한 시급성이 인식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기회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일반 학교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면대면 수업 중심의 교육에

70) 황은희(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집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에게 방송·정보통신교육을 활용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 다. 추진 과정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은 50년간의 사업 수행을 통해 크게 두 차례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첫째로 2004년,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개교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정책·인프라 등을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성에 적합하게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체제 혁신을 목표로 라디오수업 체제에서 사이버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관련 사업들의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로 2011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01.06.)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의 첫 토대가 되는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추진이 시작되었으며, 학습경험인정제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기반을 확충하는 변화를 도모하였다.

### 1)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법·제도 개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련 법·제도·정책 마련과 개선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변화 및 현장 교육 대응을 이끌어냈다.

【표 IV-10】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법·제도 개선 주요 현황(1973년~현재)

연차별	추진 내용
설립·발전기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계획 발표(문교부, 1973.02.)</li> <li>·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연구 위탁(문교부, 1973.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KEDI, 문교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973.07.)</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 제정(1974.01.)</li> <li>· 서울, 부산 11개 공립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개교(총 11개교, 1974.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확대(총 36개교, 1975.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확대(총 40개교, 1976.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규칙 제정(1976.09.)</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확대(총 50개교, 재학생 48,067명, 1987.03.)</li> </ul>
전환기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와 학-연 협정(협력연구센터, 2004.05.)</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li> </ul>

연차별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지원 계획 수립(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지원 계획 포함, 2011.01.)</li> <li>· 시수단위이수제(현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 개정(2011.08.)</li> <li>· 방송중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2012.01.)</li> <li>· 대구, 광주 2개 중·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개교(총 2개교, 2013.03.)</li> <li>· 방송통신중학교 4개교 설치·확대(총 6개교, 2014.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 설치·확대(총 42개교, 2014.03.)</li> <li>· 방송통신중학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겸직수당 확보(2015.01.)</li> <li>· 방송통신중학교 6개교 설치·확대(총 12개교, 2015.03.)</li> <li>· 방송통신중학교 8개교 설치·확대(총 20개교, 2016.03.)</li> <li>· 방송통신중학교 3개교 설치·확대(총 23개교, 2018.03.)</li> <li>·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 설치·확대(총 24개교, 2019.03.)</li> </ul>
확대·성숙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검토(2020)</li>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수업 연한 유연화 및 학점제 적용 방안 마련 연구 수행(2020)</li> <l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수행(2021)</li>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콘텐츠 활용 확대를 통한 중등교육 지원 체제 구축(2021)</li> </ul>

## 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제 개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라디오 체제에서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되면서 학사운영의 유연화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운영체제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분교형, 청소년반 등 다양한 운영모형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 표 IV-11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제 개선 주요 현황(1973년~현재)

연차별	추진 내용
설립·발전기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교도소에 재소중인 모범 수감자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확대·실시, 김천중앙고 및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교도소 분교 설치·운영(1981.06.)</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제1회 문예경연대회(현 학예경연대회) 개최(1981.10.)</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 교원 및 관계자 국외연수 실시(1985.08.)</li> <li>· 천안소년교도소에서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분교장 설치(1991.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운영(아현직업학교 위탁, 1992.03.)</li> </ul>
전환기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 학사운영 방안 마련(2004)</li> <li>·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온라인 광고 추진(2004)</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정보소양능력신장사업 추진(2004)</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 교원연수 시범 운영(2005)</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사이버교육체제 시작(2006.03.)</li> </ul>

연차별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2006.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전 학년 사이버교육체제 전환(2008.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10대 학생을 위한 '인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2011)</li>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시수단위이수제(현 학습경험인정제) 전면 시행(2013.03.)</li> <li>·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신설 및 분교형 전환(2014.03.)</li> <li>·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신설(2017.03.)</li> </ul>
확대·성숙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경험 인정 대상 영역의 확대 및 인정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체제 개선 연구 수행(2020)</li>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잠재수요자를 고려한 홍보방법 다변화 모색(2020)</li> <li>· 국가 재난 상황 대비 대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방안 연구 수행(2021)</li> <li>·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체제 개선 및 내실화(2021)</li> </ul>

### 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수학습체제 개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콘텐츠 및 교과 교재를 개발·제공하고 사이버교육시스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수학습지원체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표 IV-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수학습체제 개선 주요 현황(1973년~현재)

연차별	추진 내용
설립·발전기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첫 교육과정(안) 제정(1973.07.)</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제2차 교육과정, 1973.~1975.)</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라디오수업 및 출석수업 실시(1974.03.)</li> <li>· 「통신학습자료」 제1호 발간(1978.04.)</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통신학습시스템 개발(에듀넷 탑재, 1996.12.)</li> </ul>
전환기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자료의 디지털 DB 구축 시작(2004)</li> <li>· 학습 재청취 기회 제공을 위한 라디오 강의 테이프 복사 서비스(2004)</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시작(2004.03.)</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용 콘텐츠 개발(2004~2007)</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라디오 방송강의 서비스 종료(2010.02.)</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바일 학습서비스 시작(2012.03.)</li> <li>·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정규 교과 콘텐츠 개발(2010~2013)</li> <li>· 학습미디어 다변화 전략 수립(2010)</li> <li>·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주요과목 튜터 운영(2011)</li> <li>· 방송통신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기반 연차적 콘텐츠 개발(2012~2015)</li> <li>·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교과 수업 콘텐츠 개발(2013~2014)</li> <li>·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적응 콘텐츠 개발(2015)</li>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콘텐츠 개발(2015~2017)</li> <li>· 방송통신중학교 기초영어·수학 콘텐츠 개발(2015~2018)</li> </ul>

연차별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ICT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수업 운영(2017~2019)</li> <li>·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정규 교과 콘텐츠 개발(2018~2021)</li> <li>· 영어·수학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제공(2019~)</li> <li>· 방송통신중학교 학습더하기 콘텐츠 개발(2019~)</li> </ul>
확대·성숙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문제은행시스템 및 종합상담 챗봇 도입(2020)</li> <li>·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선택교과 콘텐츠 개발(2020~2021)</li> <li>· 학습자 맞춤형 안전교육 및 부가학습 지원 콘텐츠 고도화(2020)</li> <li>· 교과교재 제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계속계약 체제 마련(2020~)</li> <li>· 방송통신중학교 기개발 교과(1차년) 콘텐츠 평가문항 추가 개발(2021)</li> <l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재구축 및 고도화(2020~2021)</li> </ul>

## 라. 성과

### 1)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법·제도 개선

#### 가) 교육정책 변화 및 미래교육 대응 등 현장 연계와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오고 있다. 관련 연구는 2022년 현재 파악된 건수(2005년~2022년) 기준 총 58건이 수행되었으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의 교육정책 적용, 미래 교육 전환 대비, 연구 결과의 사업 환류를 통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표 IV-1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수행 연구 현황(2019년~2022년)

연번	연도	연구명	비고
1	2022	방송중·고 머신러닝 예측모델 기반 맞춤형 피드백 제공 방안 연구	미래교육 대응
2		방송통신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방안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3	2021	방송중·고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 방안 연구	미래교육 대응
4		국가 재난 상황 대비 방송중·고 운영 방안 연구	미래교육 대응
5	2020	방송중·고 맞춤형 교육자원을 위한 학습 분석 모형 개발	미래교육 대응
6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	운영 내실화 및 환류
7		2020년 방송중·고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8	2019	방송중·고 중장기 수요 예측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9		방송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방안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 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 담당관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무부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상시 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와 더불어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 교원 처우 및 수당 개선, 학생모집 기준 검토, 학생 관리 등)을 논의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IV-17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 추진체계

## 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제 개선

### 가) 교육소외계층 중등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에 개교를 시작하여 교육소외계층의 중등 학력 취득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생 수도 2019학년도에만 소폭 감소하였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생 수도 2,400명~2,500명 수준으로(2020학년도 2,484명, 2019학년도 2,537명, 2018학년도 2,501명) 주 학습자층인 성인 학습자들의 중등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표 IV-1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수(2017년~2021년) 및 졸업생 수(2016학년도~2020학년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생 수	14,348명	14,357명	14,595명	14,767명	14,932명
구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졸업생 수	4,258명	4,620명	4,695명	4,550명	4,728명

### 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에서는 풍부한 학창 생활의 경험과 학습자 특성에 맞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대다수는 성인 학습자로 친구,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업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에 맞추어 교과 학습, 비교과 활동, 자기이해 및 진로 설계 등의 다방면에서 교육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표 IV-1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학습더하기	· 영어, 수학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영상강의, KEDI 튜터 및 교육봉사자를 통한 실시간 화상수업 제공, 학습 문자메시지 발송 ※ 2021년 기준 성취도 향상 결과: 영어 92%/수학 53.8%(방송중), 영어 45.5%/수학 43.6%(방송고)	
학습경험인정제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밖 학습 경험(자격, 검정고시, 국가무형문화재 등)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 ※ 2021년 기준 인정 인원 및 건수: 42명/110건(방송중), 262명/857건(방송고)	
학예경연대회	· 경연(문예, 서예, 회화 등)을 통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활성화 및 비경연(청춘동아리, 어울림한마당)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 ※ 2019년 기준 방송고 39회, 방송중 6회 운영 ※ 2021년 온라인 공모전 대체 운영: 경연 접수 184건(방송중), 249건(방송고)	
학 업 적 응 력 제 고	자기이해 프로그램	· 성인 학습자가 대다수인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이해 및 학업적응력 향상을 위한 성격 유형, MBTI 검사 운영 및 성격 유형별 해설 동영상 강의 제공 ※ 2021년 기준 방송중 참여 인원: 671명(14개교)
	생애교육 프로그램	· 방송통신고등학교 10대 학습자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인 학습자를 위한 재무, 여가, 건강, 변화관리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애설계 지원 ※ 2021년 기준 방송고 참여 인원: 46명(인성교육), 940명(생애교육)
	인성·진로 온라인검사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흥미·적성 탐색 지원을 위한 적응역량검사, 성격검사, 진로적성검사 운영 ※ 2021년 기준 방송고 참여 인원: 190명(적응역량), 213명(성격), 534명(진로)

구분	주요 내용
찾아가는 ICT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학습자가 대다수인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학교별 3회차)</li> <li>※ 2021년 기준 방송중 참여 인원: 1,219명(17개교)</li> </ul>

### 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수학습체제 개선

#### 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주요 교육방법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충학습 자료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 영상과 함께 학습활동, 과제, 평가까지 포함하는 콘텐츠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 콘텐츠는 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 48종 전 과목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포함 전 과목 대비 약 72%에 해당하는 72종이 개발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28종, 방송통신고등학교 41종의 콘텐츠를 공유하여 일반 중·고등학교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주 학습자층인 성인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와 연계된 교과교재를 전 학년 제작 및 보급하고 있다.



그림 IV-18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과교재 예시(2021년)

#### 나)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1974년 첫 개교 당시에는 라디오수업과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2004년 사이버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개교가 시작된 방송통신중학교 시스템과 더불어 2022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수업 콘텐츠, 과목별 진도율, 질의응답 게시판 제공 등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학습더하기’ 화상수업 운영, 학습경험인정제 신청 및 접수,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관리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한 학습관리 체제 마련 및 사용자 친화적 환경 구성, 기능 고도화를 위해 2019년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통합플랫폼 재구축 및 고도화가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2022년 3월 신규 사이버교육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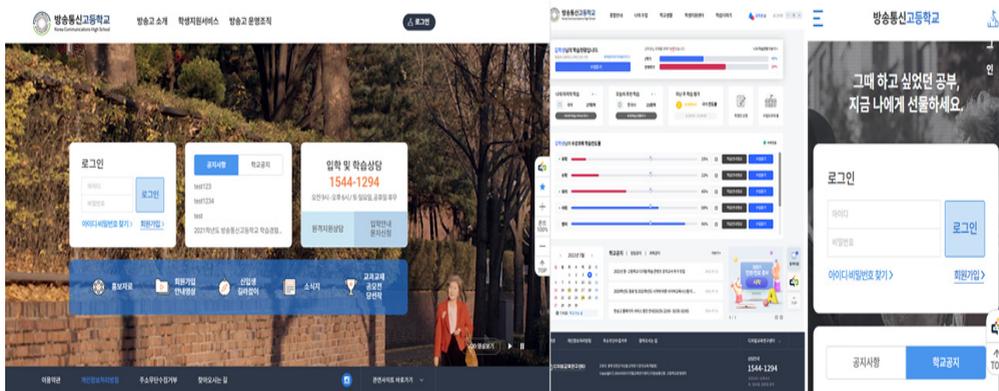


그림 IV-19 | 방송통신고등학교 신규 웹페이지 화면 예시

#### 마. 향후 전망

첫째,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생 수요는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체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주요 학습자가 성인이었으나(60대~70대 학습자 다수), 점차 20대, 학생선수, 학교 밖 청소년 등 연령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체제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체성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원격수업이 운영되었으며,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신기술 적용이 주요하게 논의되면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 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교육 지원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연령이 높고 기초학력이 낮으며, 점차 다양한 연령과 학습 목표를 가진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맞춤형 학습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평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 추천, 피드백 제공 등의 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 변화 및 미래교육 전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미래교육 전환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고, 교육회복,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라디오 수업 체제에서 사이버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년간 원격수업 콘텐츠 및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에 따른 운영 변화도 도모해 나갈 것이다.

## 10. 시·도교육청 평가 사업(71)

## IV

### 가.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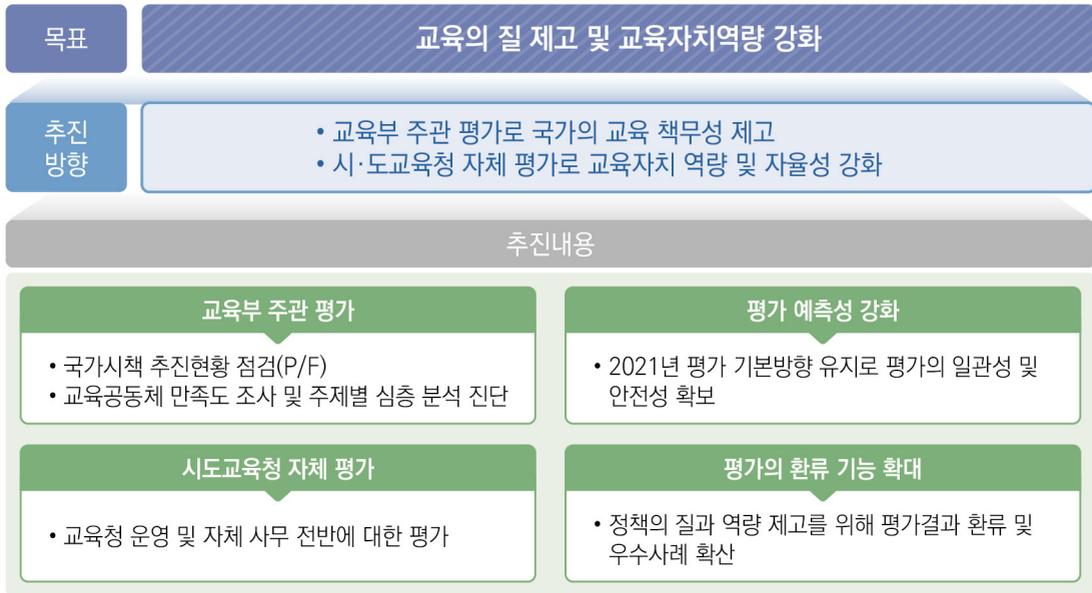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 도입되어 올해로 27년째 실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초기에는 현재와 같은 사업의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시·도교육청 평가가 이처럼 사업의 형태로 추진된 것은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본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주하면서부터이며, 이때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은 본 사업을 14년째 수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 당시 평가의 목적은 5·31 교육개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 행·재정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며,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는데 있었다(이종재·정성수·김영식, 2007). 이후 평가 실시 과정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27년째라는 긴 역사에 걸맞게 시·도교육청 평가는 평가 실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1996년 평가 도입 이후 매년 또는 격년 평가,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로 통합되기도 하였으며, 2010년 상시평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량 및 정성평가가 병행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교육자치 강화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며, 다시 2021년부터는 기존의 서열화 평가체제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2021).

71) 정규열(홍보자료실) 집필

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목표 및 추진 방향은 [그림 IV-20]과 같다.



■ 그림 IV-20 ■ 시·도교육청 평가 추진 목표 및 방향

## 나. 도입 배경

1990년대부터 국가의 통치 구조가 분권화·자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가 보편화되어 공공부문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확보와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공은배 외, 200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 변화와 함께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과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구자역 외, 2013).

첫째,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지방교육자치제 구현의 중요한 요소인 지방교육행정의 분권화·전문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학교단위까지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종재·정성수·김영식, 2007).

둘째,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5·31 교육개혁안의 세부 개혁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의 일환으로 1996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평가 도입이 건의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 도입되어 교육의 분권화·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 다. 추진 과정

시·도교육청 평가의 추진 과정은 연차별 주요 특징, 평가 방법, 결과 발표 방식을 중심으로 평가 도입기(1996년~2000년), 평가 전개기(2001년~2010년), 평가 발전기(2011년~2022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평가 도입기(1996년~2000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평가는 5·31 교육개혁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첫 해인 1996년에는 교육정책분야 7개 과제, 55개 항목, 교육개혁분야 15개 과제, 50개 항목, 1997년에는 교실수업 개혁,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복지 구현, 교육정보화 및 행·재정 지원체제의 효율화, 교육개혁 추진의지 및 기반 조성 등 5개 영역, 20개 과제, 1998년에는 교실수업 혁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지원체제 강화 등 4개 영역,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1999년에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교육지원체제 강화 영역 등 5개 영역, 19개(시)·20개(도)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2000년에는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평가 방법은 교육청을 시·도로 구분하고,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가 병행 실시되었으며, 1998년에는 교육청을 시·도로 구분한 후 각각 2개 권역 총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평가 결과 발표는 분야별·과제별 상위교육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6년과 1997년은 분야별·과제별 상위 1, 2위 교육청, 1998년은 권역별·과제별 1, 2 교육청, 1999년은 영역별 최우수 교육청(시·도 각 1개), 우수 교육청(시 2개, 도 3개)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IV-16】 1996년~2000년 시·도교육청 평가 주요 특징, 평가 방법 및 결과 발표

연도	주요 특징	평가 방법	결과 발표
1996(1차)	· 평가제도 최초 도입 · 교육정책분야(7개 과제, 25개 항목) 및 교육개혁 분야(15개 과제, 50개 항목) 평가	· 시·도 구분 · 서면평가 · 현장평가	분야별·과제별 상위 1,2위 교육청
1997(2차)	· 교실수업 개혁 등 5개 영역 20개 과제 평가		분야별·과제별 상위 1,2위 교육청
1998(3차)	· 시·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 평가(시·도 각 2개 권역)인구수(200만) 등 기준 · 교실수업 혁신 등 5개 영역 20개 과제 평가		권역별·과제별 1,2위 교육청
1999(4차)	·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새학교문화 창조 등 5개 영역 19~20개 과제 평가		영역별최우수(시·도 각1개), 우수(시2개, 도3개)
2000	평가 미 실시		

※ 출처: 교육부(2018: 16).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2018~2022)을 재정리

## 2) 평가 전개기(2001년~2010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전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도교육청 평가는 매년 또는 격년 실시, 타 평가와 통합되는 등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2001년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 평가가 도입되었으며, 국가주요 정책사업 등 3개 영역, 36개 과제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었다. 2003년, 2005년에는 국가 주요정책사업 등 3개영역, 29개 과제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특히 2005년은 시·도교육청 평가 외에 별도로 혁신기반역량, 혁신관리역량, 공동혁신 및 자체혁신, 교육정책, 재정운용성과를 중심으로 한 혁신 및 재정평가가 이루어졌다. 2002년, 2004년에는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2006년은 교육정책평가, 혁신평가, 재정평가 등이 지방교육 혁신 종합평가로 통합되어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주요 평가 내용은 지방교육혁신, 국가주요정책(I), 국가주요정책(II), 재정운영성과, 고객만족도 등이다. 2007년에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혁신 분야 평가만 실시되었으며, 주요교육정책 등 4개 영역, 18개 과제에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기존의 평가체제와 비슷한 형태로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체계는 크게 바뀌었다. 2009년에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등 5개 분야, 12개 영역, 40개 과제, 305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었다.

2010년에는 교육정책 계획 수립, 추진과정, 추진실적 등을 연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상시평가를 통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와의 연계, 핵심과제 위주의 평가지표 구성, 현장평가 방식 개선, 정량평가 결과의 DB 구축, 평가시기의 정례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0년 상시평가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현장평가는 폐지되고 그 대신 시·도별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평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0년 평가 내용은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학생능력 증진,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체제 효율화, 고객만족도·공직윤리·수용도 등 5개 영역, 37개 지표이다.

이 시기의 평가 방법도 교육청을 시·도로 구분하고,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가 병행 실시되었다. 다만, 현장방문평가는 2009년까지만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 시·도교육청 평가는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는데, 평가 결과 발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1년, 2003년, 2005년에는 영역별 최우수 및 우수 교육청, 2005년 혁신 및 재정평가에서는 과제별 시·도 전체 성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는 과제별 시·도 종합 성적, 분야·영역별 성적, 최우수 및 우수 교육청, 2007년에는 영역별 최우수 및 우수 교육청, 2009년에는 최우수 및 우수교육청, 분야별 상위 교육청, 2010년에는 종합 및 분야별 순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IV-17】 2001년~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주요 특징, 평가 방법 및 결과 발표

연도	주요 특징	평가 방법	결과 발표
2001(5차)	· 자율 특색사업 평가 실시 · 국가주요 정책사업 등 3개 영역 36개 과제 평가	· 시·도 구분 · 서면평가 · 현장평가	영역별 최우수(시·도 각1개), 우수(시2개, 도3개)
2003(6차)	· 국가주요 정책사업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평가		영역별 최우수(시·도 각1개), 우수(시2개, 도3개)
2005(7차)	· 국가주요 정책사업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평가 ·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평가 별도 실시		영역별 최우수(1개), 우수(1개)
2006(8차)	·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시·도교육청평가, 혁신평가, 재정평가 통합) · 지방교육혁신 등 5개 분야, 9개 영역 52개 항목 평가		종합 및 분야별 순위, 영역별 최우수(시·도 각1 개), 우수(시2개, 도3개)
2007(9차)	·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혁신평가) 실시 · 주요교육정책 등 4개영역 18개 과제		영역별 최우수(시·도 각1 개), 우수(시2개, 도3개)
2008	· 평가 미실시		
2009(10차)	· 학교교육 내실화 등 5개 분야 12개 영역 40개 과제 평가		종합결과 최우수(시·도 각1개), 우수(시2대, 도3 개), 분야별(시·도 각2개)

연도	주요 특징	평가 방법	결과 발표
2010(11차)	· 상시평가 도입 및 현장평가 폐지(현장평가를 시·도별 우수사례 발표평가로 대체)	· 시·도 구분 · 서면평가 · 발표평가	종합 및 분야별 순위

※ 출처: 교육부(2018: 16).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2018~2022)을 재정리

### 3) 평가 발전기(2011년~2022년)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도교육청 평가는 평가체제, 평가 내용과 방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정보공시·NEIS 등 공개정보(data)를 활용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평가로 실시되었다. 이의 주된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평가 내용은 교육성과(학생 및 교원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혁신, 학교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재정 효율화), 교육정책(시·도교육청 주요 정책과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이다. 2012년, 2013년 평가 역시 2011년 평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2014년부터는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2013년 향후 5년간(2014년~2018년)의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평가의 안정성 확보,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 확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점진적 전환을 도모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2017년에 들어서서 시·도교육청 평가는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 시·도교육청 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가지표의 잦은 변화로 인해 평가의 안정성 부족, 평가결과의 서열화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및 평가부담 가중,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 과도한 재정지원 격차로 시·도교육청 간 위화감 조성 및 불만 제기 등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간소화, 평가예측성 강화, 평가의 환류기능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평가 내용은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등 3개 영역, 30개 지표로 이때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평가지표 총량제(30개 지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2018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 주관평가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이 지속되고, 장기간에 걸친 심층 분석 진단 미흡, 정책 집행과 평가결과 공개 간 1년 시차로 인한 평가환류 시기의 문제점이 나타나 2021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는 기존의 평가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2021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는 핵심 국가 교육정책에 한해 추진 현황을 기준 통과여부(P/F)로 점검(평가지표별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병행하여 평가타당성 제고)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주제별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심층 분석 진단하여 정책제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평가결과 공개 시점 개선으로 평가환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평가 방법 역시 교육청을 시·도로 구분하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2011년~2017년), 서면평가와 면담평가(2018년~2020년)가 병행 실시되었다. 2021년부터는 기존의 평가방법이었던 서면평가와 발표·면담평가가 폐지되고, 주요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만족도 조사, 심층 분석 진단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시기의 평가 결과 발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종합 순위 및 종합 등급, 2012년에는 종합 등급 및 지표별 등급,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종합 순위 및 영역별 순위, 2017년에는 영역별 우수교육청, 2018년에는 시범평가로 비공개, 2019년과 2020년에는 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시범평가로 실시되어 비공개 하였으나, 2022년은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IV-18】 2011년~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 주요 특징, 평가 방법 및 결과발표

연도	주요 특징	평가 방법	결과 발표
2011(1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정보공시·NEIS 등 공개정보(data)를 활용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구분</li> <li>· 서면평가</li> <li>· 발표평가</li> </ul>	종합순위 및 종합등급 (5등급)
2012(13차)			종합등급 및 지표별 등급
2013(1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 단순화로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 경감 및 평가 신뢰도 제고</li> <li>· 학교단위 성과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청 성과 추가</li> </ul>		종합순위 (시 3위까지, 도 4위까지), 영역별 (시/도 각 1,2,3위)
2014(1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2014년~2018년) 평가지표 설계로 평가 안정성 제고</li> <li>· 정성평가 비중 확대</li> <li>· 학생, 교원, 학부모 만족도 등 현장중심 정책지표 비중 강화</li> </ul>		종합순위 (시 3위까지, 도 4위까지), 영역별 (시·도 각 1,2,3위)
2015(1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색사업의 연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평가 강화</li> <li>· 가·감점제도 신설</li> </ul>		종합순위 (시 3위까지, 도 4위까지),

연도	주요 특징	평가 방법	결과 발표
2016(17차)			영역별 (시·도 각 1,2,3위)
2017(18차)			종합순위(시3위, 도4위) 영역별(시·도 각 1,2,3위)
2018(1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간소화, 평가예측성 강화, 평가환류 기능 확대</li> <li>· 공교육 혁신 강화 등 3개 영역 30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구분</li> <li>· 서면평가</li> <li>· 면담평가</li> </ul>	시·도 개별통보(비공개)
2019(20차)			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
2020(21차)			시·도 개별통보(비공개)
2021(2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16개 지표)</li> <li>·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16개 지표와 연계하여 문항 개발)</li> <li>· 주제별 심층 분석 진단(16개 지표 중 선정) 등 세 축으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li> <li>· 조사</li> <li>· 분석 진단</li> </ul>	시·도 개별통보(비공개)
2022(23차)			공개 원칙

※ 출처: 교육부(2018: 16).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2018~2022)을 재정리

## 라. 성과와 향후 과제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 도입 이후 27년째 실시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가 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유도하고 정책 과제의 효과적 집행과 확산에 기여하여 교육정책의 이행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또한, 시·도 교육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학부모 등 국민들의 평가로 시·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도교육청 간 타당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교육부, 2018).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가 더 나은 평가제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정규열 외, 2020).

첫째, 평가환류 강화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 지원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 유지 기제의 하나였던 평가결과에 기초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이 일몰됨에 따라 자체 개선 노력 유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기회 부여, 평가보고서 발간을 통한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평가환류 방식은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나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평가환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등이 동시에 실시되어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평가와 분석·진단을 상호 연계 또는 차별화를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등 법정 평가제도도 상호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 또는 차별성을 확보하여 선순환될 수 있는 평가체계 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도교육청 내 관련 평가 간 차별성 및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학교자체평가 등 교육청 내부의 각종 평가 간 평가목적, 대상, 지표 등에서 중복을 해소하고, 평가제도 간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교육계 외부의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검토하여 평가의 목적, 평가 내용 및 방식,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등 평가체계 전반에서 균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설립 목적, 고유기능이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고,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기관(부서) 간 상호 모방 및 동질화보다는 기관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11. 영재교육연구사업<sup>72)</sup>

### 가. 사업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대한 초기 연구·사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영재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이다. 우리 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1987년 설치된 영재교육연구실로 거슬러 올라가고, 1996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센터로 지정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72) 최수진(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집필

제정·시행과 함께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정보시스템을 통한 영재교육 성과관리와 현장 지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직무 연수,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영재교육 유관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나. 도입 배경

1969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와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제도와 함께 수월성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70년대 후반부터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관심과 함께 80년대부터 우리 원에서는 영재의 특성이나 영재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영재교육에 대한 시범운영이 시도되었다(조석희, 2004a). 1987년에는 우리 원에 우리나라 최초로 영재교육연구실이 설치되었고,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 및 자료 개발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보고서에 영재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6년부터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영재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영재판별 도구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영재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조석희, 2004a).

1999년 12월 28일 ‘영재교육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2000년 1월 공포, 2002년 3월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2년에는 동법 시행령도 제정·시행되었다. 2002년 4월 제정·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일하게 명시되었다<sup>73)</sup>(시행령 제38조 제1항).

## 다. 추진 과정

### 1)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영재교육연구센터는 80년대부터 영재교육에 대한 수많은 정책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영재교육 중장기 정책 수립, 교육과정 질제고, 선발 방법 개선, 영재교육기관의 평가, 영재의 특성, 영재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전략,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기관 간 연계성 강화, 선발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실시했다.

---

73) 2008년 10월 14일 개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이 추가됨.

특히,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전략을 제공하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석희 외, 2002a; 김미숙 외, 2007; 서예원 외, 2012; 김주아 외, 2017)를 모두 수행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 영재교육 중단연구가 특징적이다. 「한국영재교육 중단연구」(한은정 외, 2017; 김주아 외, 2018, 2019, 2020; 이림 외, 2021)는 영재교육대상자의 경험, 발달 및 성장, 사회적 공헌 등에 대해 장기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 효과성을 중단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2017년 영재학교 입학생을 25년간 추적 연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2022년 연구에는 2022년 입학생 코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심층면담을 통해 영재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진로 선택과 학교 적응 과정, 성장과 성취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영재교육의 성과와 효과성을 보여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주요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19】 영재교육 관련 주요 연구 목록

연도	주요 연구 주제
1984	·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999	·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0	· 창의적 지식 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방안 연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 제정과 관련하여 ·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
2001	·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 및 평가방안 연구
2002	· 과학영재의 지속적 발굴, 육성, 관리를 위한 국가 영재교육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 영재교육 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방안
2003	· 과학영재 육성 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 초등영재의 지적·정의적 행동 특성 및 지도방안 연구 · 영재성의 발굴 및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 예술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I) · 영재교육기관 교수·학습실태 분석연구 · 영재교육기관 평가 체제 개발연구(I) · 영재학교 확대 발전 방안 연구
2004	· 영재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방향 · 중학생 영재의 지적·정의적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탐색 · 영재성 발달 및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중단연구(2004-2018): 1차년도 연구 · 언어창작영재의 심리적 특성 및 발달에 관한 기초 연구 · 영재교육기관 평가 모형 현장 적용 연구 · 영재 자율연구능력 기초탐색연구

연도	주요 연구 주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성의 발달 및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종단연구(2004-2018): 2차년도 연구</li> <li>·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개발 연구</li> <li>· 과학영재의 자율연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전략 탐색 및 교수·학습모형 개발 연구</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급 과학영재교육기관 발전방안 연구</li> <li>· 영재교육 수업 모범사례 연구</li> <li>· 영재교육에서 소집단 탐구활동 탐색연구</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학영재학교 성과 평가 및 과학영재학교 발전 방안 연구</li> <li>·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운영 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li> <li>· 영재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영재교육기관-학교-대학</li> <li>·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전망에 관한 연구</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방안 연구</li> <li>·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연수, 배치 제도 개선 방안 연구</li> <li>· 수월성 제고를 위한 수준별 학습 확대 방안</li> <li>·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li> <li>· 충남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통합적 제공 방안 연구</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II): 과학고등학교 입학자의 학업 및 진로 실태 분석</li> <li>· 한국의 영재교육: 영재교육의 현황과 국가표준 정립</li> <li>·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 전략 연구(III):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 교의 STEAM 교육 발전방안 연구</li> <li>·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li> <li>· 소외계층 영재학생 사례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융합인재교육(STEAM) 적용 방안 연구</li> <li>· 영재교육 진흥법 개선을 위한 연구</li> <li>· 영재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발 연구(Ⅰ): 과학영재교육과정을 중심으로</li> <li>·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기관 평가 방안 연구</li> <li>· 영재교육 대상자 및 선발의 현황과 성과 분석</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 질제고 방안 연구</li> <li>·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경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연구</li> <li>·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li> <li>· 한국영재교육종단연구(I)</li> <li>·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영재교육종단연구(II)</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영재교육종단연구(III)</li> <li>· 영재학교 발전방안 연구</li> </ul>

연도	주요 연구 주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영재교육총단연구(IV)</li> <li>·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시대의 영재교육: 변화전략 탐색</li> <li>· 한국영재교육총단연구(V)</li> <li>·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도입 방안</li> <li>· 영재학교 운영성과 평가제도 도입 방안</li> </ul>

## 2) 영재교육대상자 판별·진단·선발도구 개발

영재교육에서 영재를 판별하거나 영재교육대상자를 진단, 선발하는 것은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판별, 진단, 선발 도구를 개발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사업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교사관찰추천제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발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발도구는 ‘KEDI 영재성 검사도구’와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 도구’의 두 종류로 개발된다. KEDI 영재성 검사도구는 유창성, 융통성 등으로 구성된 창의사고를 평가하는 일반 영재성 도구와 (수학, 과학, 수·과학통합, 인문사회, 정보과학) 영역별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적 탐구능력을 평가하는 영역별 영재성 도구로 구분된다.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실생활 상황제시형, 수행관찰형, 심층면접형) 유형별로 수학, 과학, 인문사회, 정보과학 영역에서 개발된다.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선발도구를 개발하고 활용안내서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선발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 실시된 영재 판별·진단·선발도구 개발 및 관련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20】 영재 판별·진단·선발도구 개발 및 관련 연구

연도	주요 내용
1985	· 과학영재 변별을 위한 과학적성 검사도구 개발 연구
1993	· 고등학교 과학영재 판별도구 개발(창의적 과학문제해결력 검사)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개발(I)</li> <li>· 인문·사회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I): 언어 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중심으로</li> </ul>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개발(II)</li> <li>· 인문·사회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II)</li> </ul>
2003	· 예술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2013	· 영재 학생 관찰 도구 개발 연구
2018	·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 창의사고·수학

연도	주요 내용
2019	·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초·중학생용 창의사고, 수학, 정의 역량
2020	·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 기초연구(III): 과학
2021	·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연구(IV): 과학
2007 ~ 계속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 3)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2009년 12월 국가영재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영재교육 연수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1년부터 매년 영재교육 담당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해 연수의 규모나 횟수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현장의 요구와 영재교육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새로운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2022년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인공지능 시대 및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초점을 둔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전국단위 영재교육 관계자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영재교육 질 제고에 기여해 왔다. 최근 10년간 영재교육 연구센터에서 제공한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21】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목록(최근 10년)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연수*	2012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심화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STEAM교육 심화연수, 영재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직무연수
	2013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STEAM교육 심화연수, 영재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심화연수
	2014	창의·융합 교육과정 현장적용 시범학교 교원 연수, 컨설팅 전문요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직무연수, 영재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STEAM교육 심화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심화연수
	2015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초·중학교 과학 시범적용 교원 연수, 영재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직무연수
	2016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심화연수,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시범적용 전문연수, 영재교육 지도자 역량강화 전문연수
	2017	영재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전문연수, 영재교사 한마당,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기준 전문연수
	2018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직무연수, 2018 영재교사 한마당, 역량중심 영재교육 직무연수
	2019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 선도학교 직무연수, 2019 영재교사 한마당, 2019 영재교원 전문연수
	2020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 선도학교 관계자 직무연수, 2020 KEDI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강화 직무연수
	2021	KEDI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연수, 재능계발 예비 영재교육 전문성강화 전문연수

\* 연수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었으나, 최근 10년 내용만 제시함.

## 4)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배포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 수학,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을 개발하였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구체화하여 70종의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21년부터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여 개발하고 있다. 영재교육 역량중심 온라인 콘텐츠는 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개별 학생의 관심사와 요구에 따라 세부 내용의 유동적 조합을 통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영재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역량중심 온라인 콘텐츠는 온라인 영재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영재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재교육 연구센터에서 개발 또는 수행한 교수·학습 자료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IV-22】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관련 연구

연도	주요 내용
1990	· 중학교 영재를 위한 과학과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2	· 영재 심화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학급용
2005	·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I): 영재 리더십의 사회적 기대와 구성요인 분석
2006	·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II):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화 및 신뢰성 분석
2009	·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젝트 S&S: 선발도구와 프로그램 개발
2011	· 총론 : 창의성 계발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 개발
2012	· 학부모용 영재교육 자료개발 연구
2014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과학 · 초·중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개발 · 영재를 위한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학생용, 교사용)(10종) · 영재를 위한 사이버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교사용)
2015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수학
2016	·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인문사회
2018	·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20종)
2019	·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34종)
2020	·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16종)
2021	· 역량중심 영재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39종)

## 5)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통한 영재교육 자료의 종합적 관리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8조의2)에 의거하여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이다. 2006년 개정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8조의2)에 근거하여 2009년 GED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에는 영재성발달기록부 추가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GED는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재교육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해 왔다.

## 6) 영재교육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년 4회 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영재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국가 영재교육 현안 논의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3차 정책협의회가 실시되었으며, 22년 3월 제84차 정책협의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영재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영재교육 중단연구를 통해 영재학교 학생들의 성장과 성취를 추적 조사하여 영재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재교육 정책연구와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영재교육 정책 방안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2) 현장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 영재교육 지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초기부터 영재 판별·선발 도구 개발,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제공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해 왔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 직무 연수를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2007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를 개발·보급하며, 2018년부터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영재교육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영재교육이 확대되면서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부족에 직면하여 2021년부터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39종)를 개발·제공하였다.

## 3) 정보시스템 구축·관리를 통한 영재교육 자료의 종합적 관리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GED 시스템을 바탕으로 통계청 승인 통계인 국가영재교육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영재교육 기관 알리미를 통해 수집된 영재교육기관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해 왔다. 국가 우수인재인 영재학교 졸업생의 교육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분석하여 영재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영재교육기관 간 이력 연계와 맞춤형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 지원을 통해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영재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갖춘 종합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하였다.

## 4)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 수행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관계 부처 및 연구·전문 기관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영재교육의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은 중요하다.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년 4회) 실시함으로써 영재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였다.

영재교육연구센터는 다양한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정책적 방향을 선도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GED 시스템을 통해 영재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을 발휘해 왔다. 즉, 영재교육 연구센터는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영재교육의 정책적 방향 수립과 현장 지원을 위한 Think-Tank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GED 내 온라인 영재교육 플랫폼 구축,

역량중심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인공지능 시대 및 에듀테크를 주제로 한 교원 직무연수 등을 통해 온라인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최수진 외, 진행 중)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장기적 비전과 핵심과제 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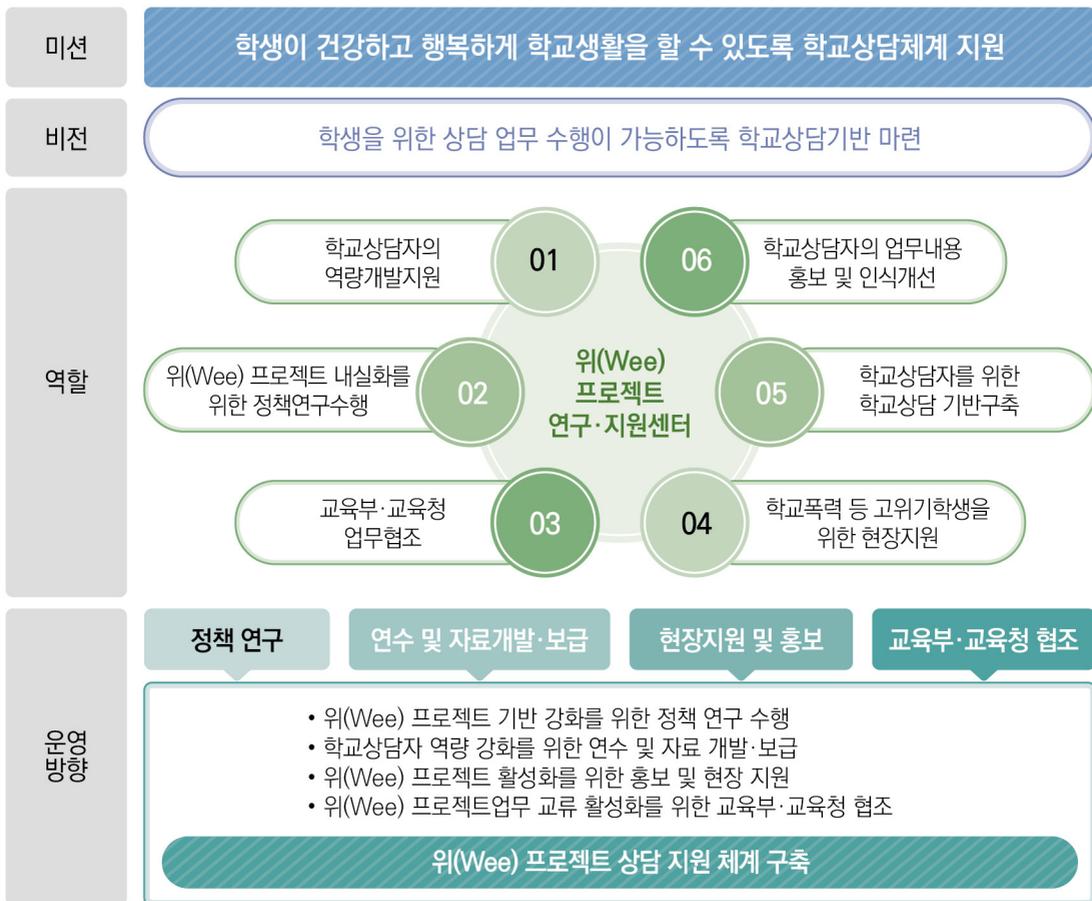
정책적 방향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영재교육의 특성상 영재교육의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점은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이다.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의 일환이다. 최근 보편교육이나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재교육은 ‘소수 엘리트 교육’으로 오해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감소하고 있다.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감소는 우수 교원 확보의 어려움(교원 전문성 함양 기회 감소, 교원 지원체계 축소)과 질 관리가 미흡해지는 상황(담당자의 잦은 교체, 신규 인력 배치)을 야기하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축소가 계속된다면 영재교육에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영재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영재교육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공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이 없어진다면, 그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 ‘소수 엘리트’ 집단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영재교육이 ‘사교육 유발’, ‘사교육으로 훈련된 학생 선발’과 같은 실행 상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한계로 인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집단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영재교육에서 지역·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영재교육연구센터는 지난 35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센터의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12.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sup>74)</sup>

### 가. 사업 개요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체계를 지원하여 학교 상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IV-21】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의 미션, 비전 역할 및 운영방향

74) 이선영(교육복지연구실) 집필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은 2010년 9월,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가 개소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가 개소된 지 약 1년 후에 개설·구축된 위(Wee) 센터용 종합상담시스템(위(Wee) 홈페이지, 위(Wee) 업무지원시스템, 위(Wee) 상담시스템)은 우리나라 학교 상담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핵심 기제로써 활용되어 왔다.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년간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정형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위(Wee)센터와 병원형 위(Wee)센터를 개설하는 등 위(Wee) 프로젝트 사업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나. 도입 배경

위(Wee)프로젝트는 2008년 시작된 국가정책사업으로 학교폭력·학업 중단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요인들로부터 우리 모두(We)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Education)을 통해 건강한 마음(Emotion)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7년 당시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안전한 학교’ 관련 정책이 2008년 3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구축’이라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Wee) 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와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을 경험하여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약 사업의 선정 배경에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학생의 개인적 위기(범죄, 가출, 성, 학교폭력 등)·가정적 위기(빈곤, 부모의 이혼, 다문화가정 등)·교육적 위기(학습부진, 학업중단 등)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학생 위기상담·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터하여 구성된 위(Wee) 프로젝트의 목적과 하위목표(최상근 외, 2011)는 다음의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위(Wee) 프로젝트의 목적과 하위 목표

목적	하위 목표
학생의 바른 인성과 관계 발달	학생의 바른 인성과 발달
	가족, 친구, 교사 등과의 건강한 인간관계 발달
학생의 학습 및 심리적 역량 개발	학생의 학습동기 및 삶의 동기 향상
	학생의 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학생의 다양한 강점 개발

목적	하위 목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창조	학교, 교사, 학부모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행복에 기여 행복증진에 초점을 둔 학교 운영에 기여

## 다. 추진 과정

### □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의 태동기(2008. 10. ~)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은 2008년 3월 차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8년 10월부터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과 동시에 충남 천안교육청의 위(Wee)센터 개소를 필두로 31개 센터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의 활성화기(2010. 09. ~)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은 2010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를 개소하면서 비로소 본 사업의 활성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011년 9월에 위(Wee) 센터용 종합상담시스템(위(Wee) 홈페이지, 위(Wee) 업무지원시스템, 위(Wee) 상담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이 완성되었으며 2012년 1월 국가교육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 교육정책 별 국민 지지율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어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훈령 제274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위(Wee) 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를 사업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13년 7월 정부 국정과제(4대약 근절 대책)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강화 정책이 도입된 것에 이어 2014년 6월 ‘교육부 훈령’ 제108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고, 2015년 12월 ‘교육부 훈령’ 제285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역시 일부 개정되었다.

2015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거하여 위(Wee) 센터에서 ‘학업중단속려제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병원형 위(Wee)센터 등 맞춤형 위(Wee)센터를 확대·설치하였다. 2020년 3월에 이르러서는 대통령 공약사업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선정·추진의 일환으로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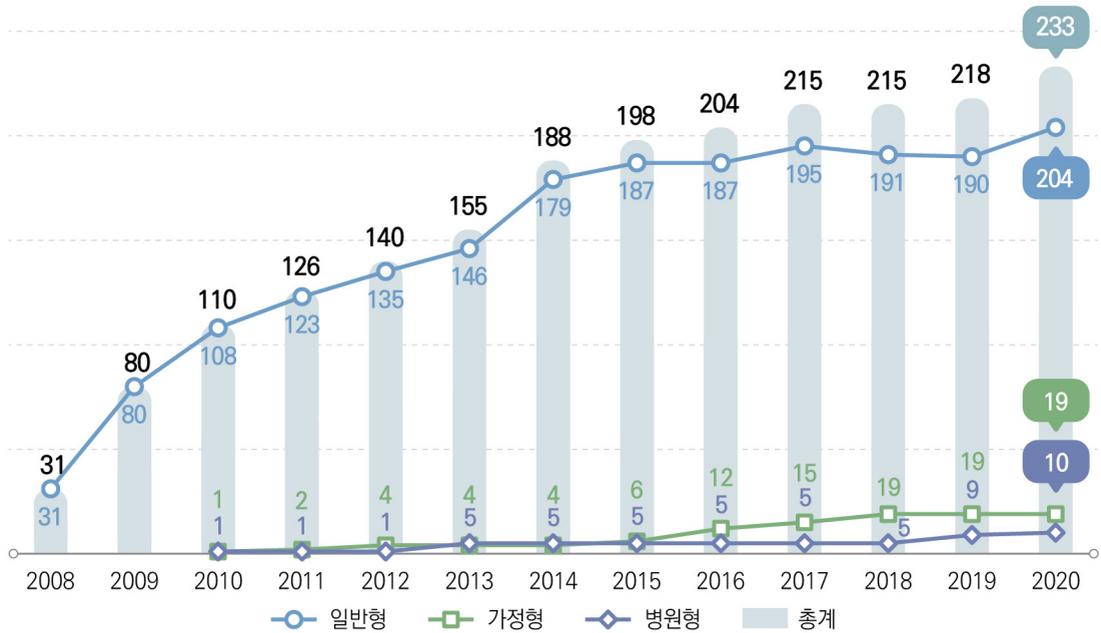
■ 그림 IV-22 ■ 위(Wee) 클래스 구축 현황(2008년~2020년)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을 위(Wee) 기관을 통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동시에 심리평가-상담-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리평가-상담-치유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는 핵심 기관인 위(Wee)클래스, 위(Wee)센터와 위(Wee)스쿨의 개설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과 배포,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및 시상식, 위(Wee) 뉴스레터 제작, 가정형 위(Wee) 센터 운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학생 상담 체계의 현장 정착과 동시에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며 사업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여 왔다(김소아 외, 2021).

이와 같은 성과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에 터하여 향후 사업 내용으로 위기 사안별 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용 위(Wee) 클래스 운영 가이드 개발,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업무매뉴얼 개발과 위(Wee) 클래스 미배치교를 위한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IV-23 ■ 위(Wee) 센터 구축 현황(2008년~2020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생활(학교 폭력, 학업 중단 등), 정신건강 및 사회적 관계(교우 및 가족)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위(Wee)기관을 통한 진단과 개입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과 처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업 기회 박탈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비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이기순, 2020) 향후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서 위(Wee)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교육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의 고유성과 전문성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3.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sup>75)</sup>

### 가. 사업 개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가치를 학교교육에서 실현하는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9.)에 제시된 교육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 덕목, 핵심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well-being)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계발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학교교육)**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는 집필자)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2021~2025)’(교육부, 2020.10.)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교육부, 2018.11)에 기반을 두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2015.1.20.)을 통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 온 교육 사업이다. 여기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 정책 주제들을 발굴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평가를 통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연구·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 왔다.

75) 김현진(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 집필

세부 사업 내용으로,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지역의 우수 학교와 교사를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지원,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전국대회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들의 일반학교로의 공유·확산, 인성교육의 범국민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최한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선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교원과 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홍보하는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나. 도입 배경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소외, 갈등 등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과 ‘시민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실제 삶과 얹이 조화된 전인적 접근의 교육이면서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개혁과 혁신의 가치를 담은 학생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성교육은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을 통해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9.)에서 밝힌 교육이념을 교육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조는 집필자)

한편, 민주시민교육은 ICCS(International Civic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국제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고 볼 수 있다. ICCS는 시민교육 관련 가장 큰 국제연구로서, 2009년 처음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주제 등 광범위한 ‘시민’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Schultz et al., 2018). 이처럼 ICCS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의식, 디지털 시민의식, 다문화 등 교육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국제 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한 ‘시민’을 주제로 한 국제 비교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태준 외, 2010).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교육부, 2018.11.)이 수립되면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었다.

#### 다. 추진 과정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내 전인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관련 사업과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사회성 및 감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차성현 외, 2012),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현주 외, 2013) 등을 통해 인성교육 관련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2013.9.)을 통해 본격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정책 관련 연구로서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 연구’를 매년 추진하였으며,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을 통한 인성교육 교실 수업 개선, 우수교원의 협력체제 지원, 인성교육 환경기반 구축, 인성교육 포럼,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전국)’ 및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매년 개최하는 등 인성교육이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는 ‘연구 → 사업 → 환류’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2018.5.)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지원(교육부, 2018.11.)하는 등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동향에 따라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의 추진 과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게 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들을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그동안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련 사업과 연구들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내 미래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생태계가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성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지원 등)와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과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 사업에서는 인성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심사를 수행하였으며, 선정된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20년 인성교육 포럼을 통해 교육환경과 학교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는 등 인성교육의 성과 확산에 기여해 왔다. 또한 종합계획에 명시된 인성교육 정책 추진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 연구를 매년 추진함으로써 인성교육 정책 추진의 성과를 점검하는 등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 두 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면,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이쌍철 외, 2019) 등을 통해 인성교육 진단과 발전 과제를 탐색하였다. 또한 OECD와 협력하여 인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서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연구 및 본조사를 4년 동안 추진하여 ‘인성’을 구성하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생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뉴 노멀 시대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김현진 외, 2021)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서 필요한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사업의 주요 허브 기능을 수행해 왔다

## 2) 과제

한 연구결과(김현진 외,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교사들은 인성교육(356명, 66.5%), 인권교육(194명, 36.3%), 참여교육(자치활동, 체험활동, 사회참여 등)(167명, 31.2%), 시민교육(참여, 연대, 존중 등)(188명, 35.1%), 세계시민교육(103명, 19.3%)의 순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목표나 내용 차원에서 개념적 관련성이 있어(교육부, 2020. 10.: 12),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구별하여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김현진 외, 2021). 따라서 이 두 가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안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갈등, 소외, 격차, 기후변화, 바이러스 전파, 소외, 격차, (세대 간·계층 간) 갈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합적 추진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미래 역량의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well-being)을 목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며, 책임감 갖기 등의 미래 역량 계발이 중요하다(OECD, 2019). 사회성, 협력, 공동체 의식, 책임감, 정서조절 등 정의적 역량이 이와 관련한 핵심 역량이라 할 때, 학교교육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김현진 외, 2020). 이를 위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차원의 정책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과 전략들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14.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sup>76)</sup>

### 가. 사업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2013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에 사회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자유학기제라는 개념을 낯설어 하고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76) 최상덕(평생·융합교육연구실) 집필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13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하기로 정함에 따라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설립 직후부터 연구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자유학기제의 설계 및 운영 모델 개발, 교사 연수 등에 전력투구하였다. 이후 센터가 수행한 사업은 크게 자유학기제의 시행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자유학기제의 운영 및 지원 주체 연수(담당교사, 장학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모니터링(만족도조사, 사례연구), 자유학기제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센터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서부터 자유학년제로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교육청, 학교, 협업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자유학기제 연구와 사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는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한 지 3년 만인 2016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었고 이어서 2018년에는 중1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주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주도하에 중1 자유학년제가 확대되면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예산이 감소하고 센터의 역할도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 대한 특교예산이 2019년에 중단됨에 따라 2020년 6월에 센터 업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 나. 도입 배경

자유학기제는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교육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고, 공약집에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설명이 총 6줄로 간략히 기술되었다. 즉,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함을 밝혔다. 그리고 실행 방안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운영”함을 제시하였다.

대선 직후 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한 동안 공약 내용에 대한 해석과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원하는 중등학교들이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시험 부담 없이 성숙한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1학기를 정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우리나라 교육상황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정립하고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데 전력투구하였다(최상덕 외, 2013).

교육부에서 2013년에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이하 ‘시범운영계획’)에 자유학기제의 운영모델이 구체화되었다(교육부, 2013). 그리고 여기서 제안된 자유학기제 운영모델을 토대로 연구학교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연구학교의 운영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맞는 자유학기제 모델이 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함께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학교의 경험과 성과가 모든 중학교들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다. 추진 과정

자유학기제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자유학기제 도입부터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운영 단계

자유학기제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학력저하, 도·농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와 절대 다수 희망학교의 운영 참여를 거쳐 3년 만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었다(최상덕 외, 2015). 이러한 성과는 연구학교 단계부터 운영학교 교사 연수의 체계화, 체험활동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 운영학교 대상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강화, 홍보와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학기 모든 운영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은 학생·교사·학부모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시·도교육청, 협업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최상덕·이상은, 2014a, 2014b, 2015a, 2015b).

수업에 대한 긍정 반응은 학생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수업 시간에 잠자거나 멍하게 있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의 수업 기획력과 효능감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최상덕 외, 2014b). 이러한 변화는 시험 부담을 덜게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학생들도 친구들과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던 체험활동들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 2) 모든 중학교로의 전면 확대부터 자유학기제 연계학기 확대

자유학기제는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희망학교 수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3년 만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었다.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전면 확대된 이후,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 운영, 즉 ‘연계학기’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연구주제 및 연구시기로 구분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유학기’를 주제로 운영된 1기 연구학교와 2016년 이후의 ‘연계학기’를 주제로 운영된 2기 연구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임종현 외, 2017: 19). 자유학기제와 연계학기제를 운영하는 시점에서 서울, 경기 등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형 자유학년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김아미 외, 2017). 그리고 이처럼 자유학기제와 연계학기제 결합한 형태의 ‘자유학년제’ 운영이 점차 다른 시·도교육청들로 확산되었다.

### 3) 중1 자유학년제의 확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유학기제, 연계학기제를 넘어 본격적으로 자유학년제로의 정책적 전환이 모색되었다(김경애 외, 2018). 교육부에서 교육청의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중1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교육부, 2017).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학교들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활동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21년 현재 90%가 넘는 중학교들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21년 말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은 현행 중1 자유학기/자유학년의 운영을 중1 자유학기(1, 2학기 중 선택)와 중3 진로연계학기(2학기)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 23). 이와 관련해 중1 자유학기는 활동 영역을 주제선택활동과 진로탐색활동 2개로 축소하고 시간도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에 따라 향후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성과

#### □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자유학기/자유학년제는 지필고사 부담 없이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살리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학생 참여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확대되고 체험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이 지자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많은 지역에 만들어진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미래 핵심역량 교육 촉진

자유학기제의 도입 초기부터 자유학기제의 목적 중의 하나로 미래 핵심역량의 배양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5 교육과정 개편에서 강조된 역량중심교육을 실행하는 데 자유학기제의 경험이 기여하였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서 자유학기제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제시한 데서 잘 나타난다(교육부, 2013).

## □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참여 확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시범운영 3년 만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이후 2년 만에 중1 자유학년제의 전국적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학교 현장의 상당한 지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는 물론 학교리더십,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운영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모니터링, 사례연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협업체제의 구축과 진로체험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 노력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였다.

## 2) 향후 전망

교육부가 2018년 이후 중1 자유학년제의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을 통해 중1 자유학과 중3 진로연계학기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자유학기제의 위상과 역할의 약화가 예상된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당시부터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 설정에 있어서 진로탐색과 학교교육 혁신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수업 혁신과 다양한 체험활동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였다(최상덕 외, 2013). 다시 말해, 수업 혁신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양 축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확대되고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학교 내의 수업 혁신에만 주력할 경우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계 밖의 폭넓은 관심과 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1 자유학과 중3 진로연계학기의 분리와 함께 자유학기의 시수 감축은 자유학기제의 상대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관련해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 15.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sup>77)</sup>

### 가.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정보관리 및 분석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운영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재정관련 정책·제도개선 및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게는 재정운영진단과 평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사업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규정」 제15조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

□ 사업수행 기간 : 2010.06~2022년 현재

□ 사업비 재원 :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분담금

### 나. 도입 배경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고 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그동안 미흡하였던 교육재정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점검 및 성과분석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또, 지방교육재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연계 분석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영·성

77) 이선호(교육재정연구실장) 집필

과에 관한 종합적 정보관리와 연계 분석이 필요하였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운영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0년 6월 지방교육재정분석 및 진단 규정(훈령) 제정을 통해 전문관리기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및 교육정보 개발·서비스 전담전문직 등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연구·정보관리 및 분석·성과평가 및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을 위탁받아 지방교육재정특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2022년 현재 교육재정연구실에서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 다. 추진 과정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정보관리 및 분석,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연구 수행,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등을 수행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 및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IV-24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 비전

2010년 6월 이후 지속되어 온 지방교육재정 분석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걸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영·성과에 관한 종합적 정보관리와 연계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및 지방교육재정 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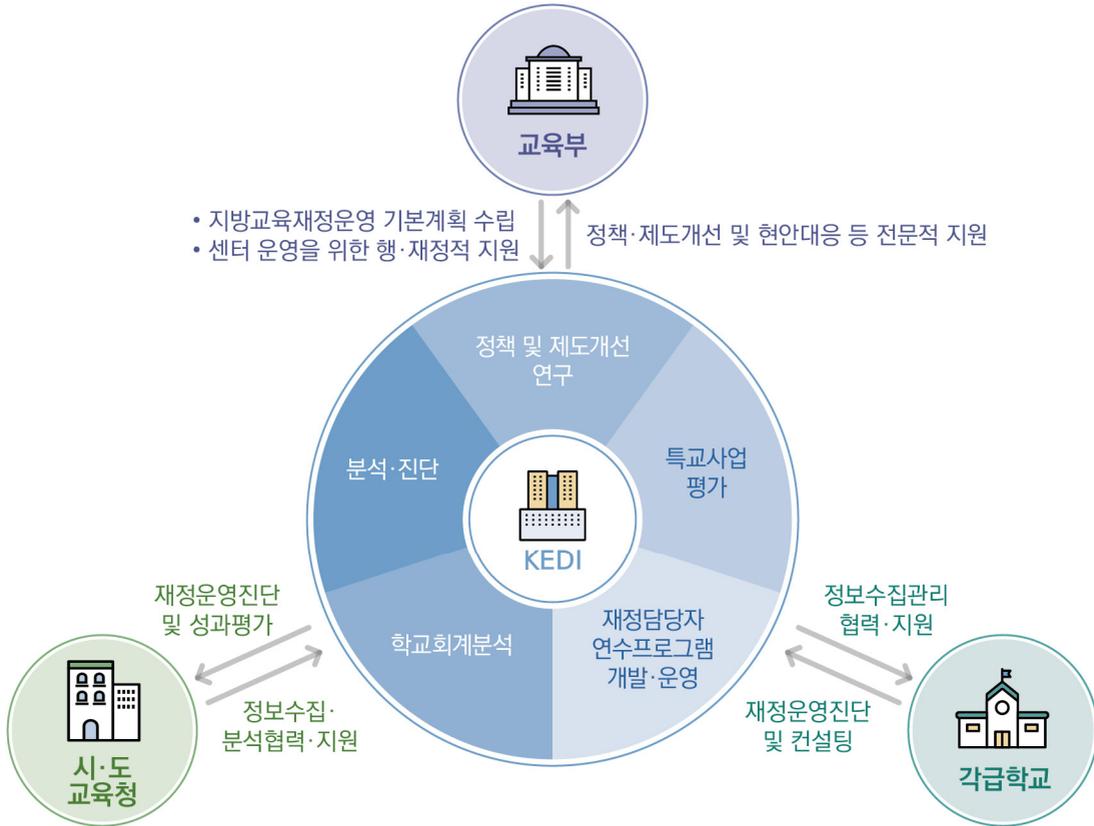


그림 IV-25 |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 운영 체제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사업 성과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의 주요한 성과는 지방교육재정분석, 학교회계분석, 특별교부금 국가 시책사업 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관련 종합적인 시계열적 통계관리 및 정보축적과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관련 정책연구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지방교육재정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발전 및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한국교육개발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효과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분석 및 환류 수행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2) 향후 전망

향후 교육재정은 인구지형 변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수요자 요구 등에 따라 자원 확보와 운용상의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재정연구실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초·중등 교육재정 연구 및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유·초·중등,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기초정책연구와 수탁 사업을 보다 균형 있게 추진하고 초·중등교육재정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평생교육재정 분야까지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외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 수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교육재정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 변화와 제도개선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6.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사업<sup>78)</sup>

### 가. 사업 개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교재개발, 멘토링활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진로상담 지원, 정책포럼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나. 도입 배경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부의 위탁으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당시 탈북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의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었던 탈북학생들은 2005년에 421명에서 2009년에는 1143명으로 4년 만에 3.6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한만길 외, 2011: 5),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은 6.1%로 한국학생들의 0.8%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었다(김지수 외, 2021: 24).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며 별도의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는 탈북학생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경험하면서 주 양육자와 장기간 떨어져서 지내는 등의 심리적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탈북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로는 남북한 학교교육의 차이로 인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남북은 장기간 분단되어 서로 다른 학교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학교문화, 교과구성, 교과교육내용, 교수방법, 평가방법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한국의 학교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다수의 탈북학생들이 별도의 학습지원을 필요로 한다. 셋째로 탈북학생들은 가정에서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고 한국의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인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78) 김지수(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 집필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북학생들의 학습지원이나 진로진학 등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표 IV-24 】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변화

연도	2009년-2011년	2012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21년
사업 중점	적응	성장, 자립	교육통합	맞춤형 지원
주요 사업	-하나둘학교(하나원) 교육 과정 및 교재개발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탈북학생용 보충교재 개발 -교원연수 -교사용 지도 매뉴얼 개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진로상담단 구성 운영 -진로캠프 운영 -우수탈북학생 역량개발 멘토링	-탈학생용 표준교재 개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일대비 의미)초·중학 교 27종 43권 인정교재 개발 보급 -교원연수 확대	-심리상담 지원 -찾아가는 진로상담 -장기 성장멘토링 -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 -하나둘학교(하나원) 진로 교육
기타	-대안학교, 민간교육시설 지원 등 학교 밖 교육지원 -대학진학설명회 -탈북교사 아카데미 운영 -홈페이지 구축	-남북 교육과정 비교를 통 한 탈북학생 지도 표준안 개발 -상호이해교육 자료 개발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하나원 탈북학부모 진로 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수업연구회 운영 지원 -연구학교 운영 지원	-한국어 교재 개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사 연수

## 다. 추진 과정

### 1) 2009년~2011년

2009년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탈북학생들이 한국사회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닦는 것이었다. 우선은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 12주간 적응교육을 받는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서 활용할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입국 초기 탈북학생들의 학업 지도에 기초가 되는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탈북학생들의 학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탈북학생용 보충교재도 개발하였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탈북학생 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전국 차원에서 교원연수도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사업들에는 정규학교 외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도 있었고,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학진학설명회와 북에서 교원을 했던 탈북교사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NK교사 아카데미도 진행되었다. NK교사 아카데미를 수료한 몇몇 탈북교사들은 탈북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되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 2) 2012년~2013년

2012년 3월에 교육부에서 ‘탈북학생 교육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의 주요 변화는 탈북학생의 성장과 자립에 강조점이 두어지는 것이었다.

2012년부터 실행된 탈북학생 교육지원 활동의 주요 사업은 탈북학생들의 성장,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 중심의 진로상담단 운영, 탈북학생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탈북학생 진로캠프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이 때 시작된 지원 사업으로 우수탈북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HOPE)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탈북학생들을 선발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멘토와 연결하여 성장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탈북학생들의 성장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지속된 사업이다.

【 표 IV-25 】 탈북학생 교육의 사업방향 전환(2012년)

구 분	현재(As-is)	발전 방향(To-be)
정책대상	· ‘탈북학생’ 군(群)	· 교육적 배경이 다른 ‘개별 학생’
대상 인식	· 지원, 수혜 대상(소의 계층)	· 통일미래 인재
교육중점	· 학교·사회 적응(학업 중심)	· <b>성장·자립</b> (학업, 심리·정서, 문화 적응 등) 통합적 지원
초기적응교육	· 교육기관 중심 - 학교와의 연계 미흡 - 정착 관련 정보 전달 위주	· 학생 중심 - 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 진단·사전 체험·통합 준비 강화
맞춤형교육	· 교사 차원의 멘토링 중심- 학년 단위로 단절	· 교사와 지원인력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사례관리 - 교육이력(포트폴리오) 연계
가정 연계	· 부모교육 미흡 - 학교와 가정의 소통 부족	· 부모교육 및 상담 확충 - 가정 지원, 협력 강화
교육기반	· 소수 대상 처방적 조치	·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관계기관 협력	· 기관별/사업별 단절	· 범부처·유관기관 협력 강화

※ 출처: 김지수 외(2021: 38)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또 다른 사업들로는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탈북학생 지도 표준안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탈북학생들의 학교 학습을 지원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그 이외에도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한 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북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 3) 2014년~2016년

2014년에는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탈북학생용 표준교재가 발행되어 일선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변화였다. 탈북학생용 표준교재란 남북의 교육과정, 학습내용, 교과진도, 교수용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탈북학생들이 북한에서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학교에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탈북학생용 표준교재는 초3-6학년, 중1-3학년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재가 개발되었는데, 총 27종의 인정교과서로 개발 보급되었다.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다른 사업들은 탈북학생 교육 연구학교와 수업연구회 지원,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원격교원원수 프로그램 개발, 하나원 탈북학생 학부모 교육 등이 있었다.

### 4) 2017년~2021년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핵심은 맞춤형 지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초기부터 강조된 것이었지만 그 핵심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실시하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었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교원연수, 매뉴얼 및 교재개발 보급 등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여왔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에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탈북학생 심리상담 지원, 찾아가는 진로상담, 장기성장멘토링, 위기학생을 위한 도움지원팀 운영, 하나둘학교 진로교육 등을 통해서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왔다.

이 시기의 다양한 사업으로는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탈북학생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탈북학생 교육 포럼,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탈북학생 밀집학교 역량강화 워크숍, 탈북학생 통계조사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있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2009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탈북학생 교육지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역량을 강화하며,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활동을 활성화해 온 것이다. 이런 성과를 드러내주는 지표로는 탈북학생 학업중단률이 있는데, 2009년 6.1%에 달했던 탈북학생 학업중단률은 2021년에 1.2%로 낮아졌다.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은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표 IV-26>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탈북학생 학업중단률의 하락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IV-26 】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추이

(단위: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6.1	4.9	4.7	3.3	3.5	2.5	2.2	2.1	2.0	2.5	3.0	2.9	1.2

※ 출처: 김지수 외(2021: 24)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 숫자가 줄어들면서 탈북학생들의 수도 약간씩 감소되는 추세의 변화는 앞으로 이 사업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 17. OECD 교육연구·사업<sup>79)</sup>

### 가. 사업 개요

우리 원은 OECD 교육국 소속 조직인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한국대표이자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참여 기관 간 협력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 수준의 다양한 OECD 연구·사업 참여를 주도해 왔다.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의제 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교육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시의성 있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 원에서는 교원 및 교직원환경, 고등교육, 교육시설환경, 미래교육 혁신(교육 2030), 디지털 교육에 이르기까지 OECD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 부문 주요 사업에 폭 넓게 참여하며 국가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내외 안팎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참여 연구·사업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위하여 OECD 교육국 정례회의인 교육정책위원회(EDPC)·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운영위원회(연 2회)에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부와 함께 한국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례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및 OECD 사업 참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각 기관별 연구·사업 추진 현황 점검, 쟁점사항 파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사업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79) 김은영(글로벌협력실장) 집필

## 나. 도입 배경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우수정책 확산 및 벤치마킹, 정책 개발과 이행 등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정회원국으로 가입과 함께 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sup>80)</sup>와 교육연구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CERI 운영위원회)<sup>81)</sup>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OECD 교육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교육 연구·사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의제 선별의 필요성과 이러한 연구·사업에 전문성에 기반하여 참여를 주도할 주체 및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양한 OECD 교육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재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교육정책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OECD 사업에 국가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관련하여 자체 연구 기획을 통해 보다 더 능동적으로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또한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참여 OECD 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재 역할의 필요를 반영하여, 2006~7년에는 총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OECD측에는 참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의 협력 전담기관으로서 주력을 다하고 있다.

## 다. 추진 과정

OECD 회원국 가입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원은 1995년 국제교육지표사업(INES)을 시작으로 한국 교육정책 후속 보고(1998~1999), 고등학교 국제조사(2001~2003),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2002~2004), 교원정책: 우수교사 충원, 개발 및 유지(2002~2004), 고등교육 규제 개혁 검토(2005~2007) 사업 등에 전문기관으로서 참여를 지원하였다. OECD 교육 부문에서 한국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OECD 교육 국내 연구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 운영 및 의사결정 조직인 CERI 운영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위원회(EDPC)에도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OECD의 두 개의 위원회는 OECD가 추진하는 교육·연구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으로, 우리 원은 동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80) 교육정책위원회(EDPC): OECD 내 교육연구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

81)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운영위원회 - 연구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 운영 및 이에 대한 의사결정 조직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관련 국내 교육정책 사례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교원 및 교직원환경(TALIS), 고등교육성과평가(AHELO), 교육시설사업(CELE),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교육 2030, 고등교육, 스마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참여해 왔으며, 국내 교육정책 발전에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원이 주관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나라가 지속하여 참여해 온 국제학업성취도평가사업(PISA), 국제성인직업역량사업(PIAAC), 유아교육 및 돌봄(ECEC) 사업 등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하여 OECD에 제시하는 등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원은 2022년 현재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참여하는 총 8개 OECD 교육사업 중 5개 사업(INES, TALIS, 교육 2030, 대학생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배양,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과 3개의 국가 대표로 참여하는 조직 및 프로젝트 그룹(EDPC/CERI 한국 대표, GNEELE 전문가 참여, 고등교육 코디네이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IV-27】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 연구·사업 주관 및 참여 현황

주관 및 참여사업	1995	2004	2008	2011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OECD INES(국제교육지표) (1995~)	[참여기간 표시]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2004~) * EDPC/CERI 한국대표단 참여	[참여기간 표시]									
OECD TALIS(교원 및 교직원환경) (2008~)	[참여기간 표시]									
OECD ESP(교육과 사회적 진보) (2015~2020)	[참여기간 표시]									
OECD 교육2030 (2015~)	[참여기간 표시]									
OECD GNEELE(교육시설환경) 참여 (2019~)	[참여기간 표시, 참여재개]									
OECD 대학생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배양 (2018~)	[참여기간 표시]									
OECD 고등교육(국가 코디네이터 참여) (2018~)	[참여기간 표시]									
OECD 스마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2020~)	[참여기간 표시, 신규발굴]									

## 1)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본 사업은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의제 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참여를 지원하고, 국내 참여 OECD 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재 역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원은 국제교육지표사업(INES)을 제외한 OECD 중·단기 연구·사업에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대규모 국제 비교 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원이 한국대표단으로 참여하는 교육정책위원회(EDPC)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해 상정된 의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OECD에 전문성에 기반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2022 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장관급회의(2022.12.07.~08., OECD 본부에서 개최)'의 의제 개발과 함께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장관급회의 주제와 연계하여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2022.11월 중 예정)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국내 OECD 참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OECD 및 회원국에 일관된 목소리와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국가 교육정책 사례 제시를 위해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국내 유관기관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다.

## 2)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본 사업은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원정책 수립 및 교육체제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목적 하에 기획되었다. TALIS 조사는 중학교 교원 대상의 본조사에서 시작되어, TALIS 2018부터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조사, 유아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TALIS 2024에서는 중학교(본조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 조사, 유아·보육 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 교사 지식 조사 등 본 조사 외에 5개의 옵션조사가 추가된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ECD 23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TALIS 2008(1주기 TALIS) 중학교 조사를 시작으로 TALIS 2013(2주기), 2018(3주기) 본조사에 이어 2024년 본조사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원은 TALIS 조사 참여를 위해 정보 수집, OECD와 참여를 위한 조율 및 조사를 지원하는 등 국가사업책임자(NPM)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TALIS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교육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연구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TALIS 2024 조사를 위한 국가사업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IV-28 】 한국교육개발원 TALIS 관련 기본연구 추진 현황

추진 연도	사업명	비고
201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2015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2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2019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I)	기본연구
2020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II)	기본연구
202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중심으로	기본연구
2022	교사의 직무 변화 분석 및 향후 과제	기본연구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2)

### 3) 고등교육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육성과 평가(Fostering and Assessing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in Higher Education)

본 사업은 예비교원교육기관 재학생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관련 정보 축적과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에서 2015년부터 15개 국가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Teaching, assessing and learning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education” 프로젝트의 성과에 기반하여 고등교육 부문으로 확장 논의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본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고 2019년에 OECD에 공식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우리 원은 교육부의 사업 참여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참여에 앞서 2019년 10월부터 대학의 참여 의향과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수시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9년 사전 준비 단계에서 OECD 프로젝트 회의 참여, 담당자와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가 교원양성트랙에 참여를 결정한 이후 2020년에는 청주교대, 공주대 2개 대학에서 3개 과목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해당 프로젝트 회의에 참여하여 참여국의 동향 파악, 국내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성과 사례 공유, OECD와 주요 사안 조율 및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한 국내 정책에 시사점 파악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평가방안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기본 연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OECD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정책이 대학에서 이해되고 적용되는 방법,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이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파악하여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4) OECD 교육 2030(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OECD 교육 2030 사업은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핵심 역량, 태도, 가치를 파악 및 규명하여 2030 학습개념들을 개발하는 1주기 사업(2015-2018)과,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2030 교수학습개념들을 개발하고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기 위한 2주기(2019~)사업으로 고안되었다. 우리 원은 2016년부터 본 사업에 국가 코디네이터로 지정되어 1주기 사업부터 참여해 왔으며, 국가 교육정책에 시사점 도출과 OECD에 관련 사례 제시를 통해 사업 산출물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21a).

2016년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윤종혁 외, 2016) 현안보고서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가 기본연구화 되어 2021년까지 OECD 교육 2030 사업 참여와 결과를 통해 국내 관련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OECD 교육 2030 학습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교육이 학생주체성 개발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21세기에 걸맞은 교육혁신 전략 및 정책을 탐색하여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OECD와 협의 하에 한국교육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교육 2030과 한국 교육’ 연적금 과제를 발굴하여 OECD 국가사례 연구진에 한국교육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배경보고서를 제공하고 조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 설정과 새로운 2030 교육체제 수립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였다(김은영 외, 2019). 2022년부터는 국가 코디네이터로서 지속적으로 OECD 교육 2030 사업 추진을 모니터링 및 정기 프로젝트 회의에 참여하며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5)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OECD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사업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21a). 우리나라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였으며, 2020년 1월 OECD에서 실시한 2021-22년 CERI 2개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시 높은 순위로 책정하며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2020년11월에는 OECD가 주최한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 회의’ (2020.11.05.)에서 한국 정책 방향을 공유하여 회원국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2021년 5월에는 우리 원이 본 사업에 국가 코디네이터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 컨퍼런스, 사업 담당자 웨비나 등에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교육 관련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 사례에 대한 OECD와 참여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OECD 프로젝트 성과에 기여하였다.

## 라. 성과와 향후 전망

### 1) 우수 교육 정책 사례 확산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제고

우리 원은 20여 년간의 OECD 교육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가별 교육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해 왔다. 우리 원이 참여하고 있는 OECD 교육국 정례회의, TALIS 운영위원회, 교육 2030 글로벌포럼,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 회의와 웨비나 등 각종 프로젝트 회의와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교육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INES, TALIS와 같은 대규모·중장기 국제 서베이 참여를 통해 회원국의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OECD 교육 2030 사업 참여를 통해서도 OECD 및 참여국 간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 2030 학습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교육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외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향후에도 OECD 교육 연구·사업에 주도적 참여를 통해 OECD 회원국, 참여국, 다자 파트너들과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 방향성 수립에 기여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는 교육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육의 형평성과 지속성의 보장,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기회와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제 교육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교육시스템에서 유사한 도전과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OECD 및 회원국 간 논의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교육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교육에서의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확인하였으며, 우리 원은 변화하는 세계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교육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별 및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성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8. 소결

본 장에서는 2021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17개의 주요 사업별 사업 개요, 도입 배경, 추진 과정, 성과와 향후 전망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각 사업의 대내외적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은 교원양성기관 평가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1998년 1주기(1998~2002) 평가를 시작으로 5주기(2018~2021) 진단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사업의 수행 결과, 국가 수준의 체계적 교원양성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각 기관들의 자체 교육의 질 개선 노력 자극, 일부 부실 운영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및 전공 축소·폐지를 통한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 기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교육부, 2018; 홍창남 외, 2017). 최근 새로운 교사양성 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정책화되고 있어 향후 6주기 진단 사업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사 교육의 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대 초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협력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하며 ‘교육개발협력연구·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육개발협력연구·사업은 다양한 개발도상국 교육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와 ODA 전문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본원의 교육개발협력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육회복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요구와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본원의 전문영역에서의 협력 요구가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기관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복지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약 10년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교육복지 용어 확산 계기)의 중앙연구지원센터로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을 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 학교 구성원 만족,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정책의 분화 및 파급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정책 사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 해소(완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시 교육안전망 정책을 맡게 되어 교육격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분석, 정책 과정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등을 적절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혁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사업’은 2006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 지원센터(EDUMAC)를 개소하면서 비롯되었고,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초·중등 학교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전문 지원을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시설·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향후에도 교육시설의 선진화와 민간투자사업의 고도화, 고품격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교육시설·환경 관련 분야의 정책 동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육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 관련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년 동안 추진되어온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적 장기사업이다. 이 사업은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교육정책의 성공적 교육현장 착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 강화와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등으로 교육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재편이 예견되고 있어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선도하여 외연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사업’은 1,000여 종의 국가 승인 통계 중 사회 분야의 핵심적인 통계 사업으로 1962년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가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어 국가적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통계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 생산, 과학적 정책 수립·평가와 교육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통계 분석 자료의 산출 및 제공,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자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통계정보의 질적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 국제기구와의 각종 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신인도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선·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은 대학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3주기 진단(2021~현재)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의 성과로는 크게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진단·평가 분야 연구 전문성 강화, 국가 단위의 평가 운영 체제의 본보기 상 정립,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대학 맞춤형 정보제공 등이 있다. 차기 진단에 대한 대학 현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 현장의 수용성 높은 차기 진단 모형과 사업 설계를 주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에 터한 대학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본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지정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로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 수립 및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성과분석과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60여 건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연구사업을 통해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질 관리에 기여해 왔다. 향후에는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화를 모색하는 한편,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재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별 격차의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의 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력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 당시,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연구를 위탁하면서 출발하였다. 이 사업은 다양한 연구 수행 및 법·제도 개선, 교육소외계층 중등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체제 개선,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공유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고도화 등의 교수학습체제 개선을 포함하여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학생 수요 다변화 예상에 따른 체제 변화 도모, 데이터 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교육정책 변화 및 미래교육 전환 대응 지속적 연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평가 사업’은 1996년 도입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은 본 사업을 2009년부터 수주 받아 14년째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수행 결과,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국가 교육정책 과제의 효과적인 집행과 확산,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통로 마련,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교육부, 2018). 2021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타당성 제고, 평가환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타 평가제도와 연계 방안, 시·도교육청 내 관련 평가 간 차별성 및 연계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정규열 외, 2020).

한국교육개발원은 1987년 우리나라 최초로 영재교육연구실을 설치하여 ‘영재교육연구사업’을 주도하였고, 현재까지 영재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교육연구사업은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현장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 영재교육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관리를 통한 영재교육 자료의 종합적 관리,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영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영재교육 정책 방안 및 미래 비전 수립에 기여해왔다. 향후에도 본 사업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역사와 함께 하며, 영재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은 2010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가 개소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체계를 지원하여 학교 상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세부 사업 내용을 토대로 학생 상담 체계의 현장 정착과 동시에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며 사업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여 왔다(김소아 외, 2021).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아울러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교육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고유성과 전문성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가치를 학교교육에서 실현하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과 ‘시민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향후에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안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학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과 전략들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교육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으면서부터이고, 새 정부의 출범 후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주력하게 되면서 2020년 6월에 센터 업무가 종료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수업 혁신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양 축으로 해서 확대·발전해 왔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미래 핵심역량 교육 촉진,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참여 확대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은 2010년 6월 지방교육재정분석 및 진단 규정(훈령) 제정을 통해 전문 관리기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원에 지방교육재정특임연구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성과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제도 발전 및 개선, 지방교육재정 담당자의 역량강화, 효과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 기반 확충,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분석 및 환류 수행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교육재정은 인구지형 변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수요자 요구 등에 따라 재원 확보와 운용상의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우리 원은 외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 수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교육재정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 변화와 제도개선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은 2009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역량을 강화하며,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활동을 활성화해 온 것이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 사업의 하나로 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입국 탈북민 및 탈북학생들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 이 사업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국 소속 조직인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한국대표이자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참여 기관 간 협력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 수준의 다양한 'OECD 교육연구·사업' 참여를 주도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여 년간의 OECD 교육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가별 교육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해 왔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세계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성 수립에 기여하고, OECD 회원국, 참여국, 다자 파트너들과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며,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다양한 국가 수준의 주요 교육정책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요 사업들은 그 중요성과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시의성과 선도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의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협력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업은 정책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통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한국 교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